

01 여는 그림-窓

02 책을 열며

다양한 빛깔과 향기의 그대들에게 _ 변연식

04 특집

‘퍼주기 한미동맹’ 이제 그만! ‘현대판 대미조공’ 방위비분담금의 문제점과 우리의 투쟁 _ 박석분

14 현장

효순이 미선이의 한(恨)이 맺힌 곳, 파주 무진리 훈련장 _ 정동석
오키나와 및 일본본토에서의 미군재편계획 진행상황과
민중투쟁 현상 _ 도요타 유키하루

22 세상 톺아보기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을 한층 가속화하는 한미연합전쟁연습
_ 오혜란

38 인물

‘노동시장의 유연화’, ‘주한미군의 유연성’ 둘다 막아내야
「대전 충남 김지수 회원」 _ 정동석

41 평화비둘기

신성 무고인들을 위한 축연과 미전략 사령부 _ 최성희

44 평통史

46 이모저모

<표지>

평통사 13차 정기 총회가 3월 1일에 열렸다.

모범회원과 모범지역 시상에 앞서 활짝 웃는 평통사 상임대표 두분.

사진 _ 오미정

<여는그림>

꽃 피는 춘삼월이라 꽃을 심고 싶었다.

어둡고 답답했던 마음도 모두 훌훌, 앞으로는 희망만 있는 냥...

얼마 안있어 우리는

아름답고 평화로웠던, 폭력과 야만으로 얼룩졌던 그 땅을 잃는다.

‘평화와 야만, 그 모두를 기억하기 위해’

무너져 내린 대추초등학교를 뒤에 놓고 피어난 어여쁜 자태를 신는다.

‘개여뀌’라는 이름의 보랏빛 들꽃이다.

글·사진 | 오미정

| 책을 열며 |

다양한 빛깔과 향기의 그대들에게

공동대표 변연식

봄이 왔으나 봄 같지가 않습니다. 건고 있으나 땅에 밭을 딛는 것 같지 않고 무슨 일을 해도 헛손질이 잦아졌습니다. 허망함과 깊은 슬픔이 밀려옵니다. 저의 마음이 이러할진대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의 마음이 어떠하실지, 그동안 함께 해 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하실지... 가슴이 아파옵니다. 차마 이런 글도 쓰고 싶지 않아 오랫동안 망설이다 펜을 들었습니다.

지난 3월 초 대보름 행사를 위해 평택에 다녀왔습니다. 2월 13일의 합의이후 그곳을 떠나야 하는 분들을 위로하고 그곳에서의 마지막 대보름을 지켜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여기 저기 무너진 폐허 속에서 지난날의 추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연푸른 수줍음으로 우리에게 인사하던 감나무 이파리들, 담 밑에 떨어져 있어도 요염하던 능소화 꽃잎들, '에덴동산이 이런 곳이었을 거야'하고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던 살구나무 근처의 동산... 이 모든 것들과 이별해야 하다니 헤어짐의 인사대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심한 듯 청정하게 떠오르는 대보름 달빛 아래에서 황새울 철조망 사이로 새로 나는 길 '신작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미군기지에는 밭과 공장만 빼고 세상의 모든 것이 들어선다는데, 그 어여쁜 가르마 같은 농로를 무참하게 파헤치고 '제국의 길'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괴물 같은 그 길로 또 얼마나 많은 괴물들이 날라져 올는지요? 또 얼마나 괴물 같은 일이 벌어질는지요. 아마도 오키나와처럼 5년 먹을 전쟁 비축 식량도 땅속에 숨겨놓으려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생산해 내던 그 땅에...

제국의 탐욕 때문에 그 땅을 일궈내고도 그 땅과 이별하고 그 땅의 죽음을 바라보아야 하는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지태 주민 대책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동안 잘 싸우셨습니다. 다만 우리의 힘이 부족했을 뿐입니다. 이 싸움은 결코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는 평화를 위한 미군기지 확장 저지 싸움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 참담함, 이 슬픔 속에서 다시 그대들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시 마음을 추스르고 새로운 결의로 새봄을 맞이해야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다시 동지의 손을 맞잡습니다. 각기 다른 빛깔과 향기를 가진 여러분 한분 한분을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내용을 잘 채워서 저 괴물들을 정밀하게 '타격'해주는 분, 피켓을 잘 만드는 분, 사진을 잘 찍으시는 분, 사회를 잘 보아서 집회나 모임을 살아있게 해 주시는 분, 백 마디의 말보다 그림으로 말해주는 분, 노동의 힘든 일정을 접고 집회에 참석해 주시는 분, 대중연설을 잘하시는 분, 조직을 잘해주는 분. 이역만리에서도 따듯하게 후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분... 그대들의 각기 다른 빛깔과 향기를 사랑합니다.

이 모든 능력에 지혜를 모아 올해에는 대중에게 더 쉬운 말로, 쉬운 언어로 다가가는 한해

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결코 녹녹치 않은 개인의 현실도 곳곳이 이겨내면서 서로에게 평화로운 기운을 퍼뜨리는 한해가 되도록 만들어 갑시다. 저에게도 많은 위로를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평화를 택한 평화운동가의 운명이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대의 하루가 화창한 봄날이기를 바랍니다.

| 특집 |

‘퍼주기 한미동맹’ 이제 그만!

‘현대판 대미조공’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경비지원금)의 문제점과 우리의 투쟁1)

글 : 교육팀 박석분

주한미군이 방위비분담금을 받아서 따로 쟁겨놓은 돈이 8천억원이란다. 이 돈을 부동산 투기펀드에 투자하거나 금융권에 맡겨 이자를 불리고 특혜를 받고있다는 소식이다.2)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도 방위비분담금을 주자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지난 몇 년 동안 평통사는 방위비분담금 대폭 삭감과 협정 폐기를 주장해 왔다. 국회 비준을 코 앞에 둔 7차 방위비분담금의 문제를 함께 알아보자.

[1] 방위비분담금이란?

우리가 매년 미군에게 주는 돈을 ‘방위비분담금’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방위비분담금’이라는 말은 ‘미국의, 미국을 위한, 미국에 의한’ 개념이다. 자신의 경제력으로는 해외주둔 미군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된 미국이 1950년대 후반부터 미군 유지비용을 이른바 동맹국에 떠넘겨온 것이 이른바 “방위 분담—defense burden sharing”이다. 따라서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유지비용’, 혹은 ‘주한미군경비지원금’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바르다.

그러면 우리가 미군에게 주는 유지비, 또는 경비지원금은 얼마나 될까?

주한미군에게 우리가 내주는 비용에는 직접비와 간접비가 있다. 직접비는 말 그대로 직접 현금이나 현물을 대주는 것이고 간접비는 토지나 시설을 무상으로 내주거나 각종 세금과 요금을 면제, 또는 감해함으로써 미군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럼, 직접비와 간접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표로 알아보자.

그럼 우리 나라가 매년 미군에게 주는 직접비와 간접비는 모두 얼마나 될까?

2004년을 기준으로 국방부가 보고한 직·간접 지원액은 13억 7,634만 달러.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약 1조 3천억원이 된다. 여기에 정부가 방위비분담금으로 계산하지 않고 있는 미군 기지이전비용 9,267만 달러(871억원), 이라크파병비용 2억 2천만 달러(2,070억원)만 합해도 1조 6천억 원이다. 지난 2월 7일 국회에서 열린 방위비분담금에 관한 평통사 토론회에서 임종인 의원은 우리 나라가 미군에 주는 직·간접비가 줄잡아 3~4조 원이 될 것이라고 추산하였다.

그런데 미국은 우리 나라의 ‘방위비 분담’이 ‘공정하지 않다’며 늘 불평불만이다. 2002년의 경우, 한국 국방부는 직·간접비를 합해서 미군에 11억 8,794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보고했는데 미국은 8억 4,311만 달러만 받았다고 한다. 무려 3억 4천4백만 달러(3,240억 원)나 차이가 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미국이 우리의 간접비 지원을 터무니없이 낮게 평가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임대료 평가인데 미국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한국 기지나 훈련장에 대한 임대료를 공시지가의 2~3%

밖에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 세계에서 유일한 카투사에 대한, 연 1천억원에 달하는 인건비 지원도 아예 쳐주지 않는다. 과연 누가 공정하지 않은가?

간접비 평가는 일단 접어두고 방위비분담금에 관한 이야기로 가보자. 앞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방위비분담금’이라고 일컫는 것은 우리 나라가 주한미군에게 지원하는 직·간접비용 중 소과 특별협정에 의해 직접비로 내주는 비용을 말한다.

소과 특별협정에 의해 직접비로 미군에게 지원되는 ‘방위비분담금’은 1989년에 302억원을 시작으로 작년 6,804억원까지 18년 동안 약 64조원이 지급되었다. 1989년과 2006년의 방위비분담금을 비교하면 15배가 늘어났는데, 같은 기간 국방비 증액은 3.7배다. ‘91년부터 ‘06년까지 국방예산 증가율이 202%인데 비해 같은 기간 동안 주한미군주둔경비지원금 증가율은 714%에 달하여 방위비분담금이 국방비 증액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매년 수천억원씩 미국에 방위비분담금을 내주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다.

방위비분담금의 법적 근거는 “한미소과 5조에 관한 특별협정”³⁾이다. 그런데 이 ‘협정’은 시설과 구역을 제외한 주한미 미군 유지경비는 미국이 부담한다는 소과5조 규정과 모순되는 ‘특별’한 협정이다.

왜 ‘특별한’ 협정이 필요했을까? 미국은 1974년까지는 한반도 주둔에 필요한 경비의 대부분을 자신이 부담했다. 그러다가 74년부터 ‘공동방위’를 내세워 경비분담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오로지 자신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였다. 그러다 80년대 말, 쌍둥이 적자 등으로 재정이 더 어려워진 미국은 본격적으로 주한미군에 대한 직접 지원경비를 요구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해서 91년에 체결된 이 특별협정은 2~3년 단위로 체결되었고, 2006년에 한미 양국이 합의한 것이 일곱번째 협정이다.

특별협정이 체결된 91년부터 지금까지 과정을 표로 보면 아래와 같다.

특별협정이 체결된 91년 이전에도 89년에는 302억원, 90년에는 495억원이 지급되었다.

특별7차 협정안은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은 상태이다.(3월 20일 현재)

이 같은 사실은 소과의 효력을 정지시킨 ‘특별협정’은 얼마든지 폐기시킬 수 있으며 방위비분담금 역시 얼마든지 그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2] 7,255억원도 모자라?

정부와 미국은 2007년부터 적용되는 7차 방위비 분담 협상을 2006년 5월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7차 방위비 분담 협상은 주한미군이 2004년 3만8천명에서 2006년 11월 현재 28,200명으로 약 1만 명이 줄고 2006년 1월 19일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유연성을 합의한 조건에서 진행되었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조건을 의식하여 “기지 이전사업 등 우리의 재정적 부담과 주한미군 감축 등 재조정 상황을 감안”해서 방위비 분담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럽스펠드 미 국방장관을 위시하여 롤리스 국방부 부차관보,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 등 미국측은 방위비 분담을 증액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감축, 철수시키겠다고 우리 정부를 위협하거나 “군살을 깎고 필요한 살까지 깎았지만 이제는 뼈까지 깎아야 한다”고 엄살까지 떨면서 끊임없이 과상공세를 펼쳤다. 게다가 협정기간을 10년, 또는 5년으로 연장하자면서 방위비

분담금을 안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평통사는 협상이 있을 때마다 기자회견이나 1인시위 등을 진행했으며 마지막 6차 협상 때는 추위와 찬 비 속에서 농성을 벌이며 외통부에 방위비 50% 삭감을 관철시키고 특별협정 폐기를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농성 참가자들은 미국의 증액 압박을 규탄하고 외통부가 협상에서 굴욕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도록 호르라기를 불고 팽과리를 쳐대며 기세를 올렸다.

협상 결과 한미 양국은 7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기간을 2007년과 2008년, 2년으로 정하고 2007년에는 7,255억원, 2008년에는 2007년도 방위비에 물가인상분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2007년도 7,255억원은 2006년 6,804억원에 비해 451억원, 6.6% 증액된 금액이다. 이 같은 결과는 최소한 삭감을 요구한 평통사의 요구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것이 아닐 수 없었다. 7,255억원이면 노동자 6만명에게 100만원의 월급을 줄 수 있고 무주택자들에게 1억원 짜리 아파트를 7천 세대 공급할 수 있는 액수다.

반면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방위비분담금이 “1천억 원 이상 부족하다”며, 이렇게 되면 미군장병들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면서 “(한국 정부와) 싸우겠다”, “한국인 고용원을 줄이겠다”며 우리 정부와 국민에 대한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3] 7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그럼, 7차 방위비는 정말 부족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NO”다. 부족하기는커녕 남아 돌아서 미군이 뒤로 빼돌려 돈놀이를 하고 부동산 투기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인건비 부족, 거짓말!]

외통부는 7차 방위비분담금의 증액 근거를 “미 측이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가 부족한 등 자금난을 겪어”온 점을 고려했다며 해명하였다. 그런데 인건비가 부족했다는 미 측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주한미군은 2005년에 한국인 고용원의 자연감소분(퇴임, 전직 등 575명)에 대해 충원하지 않음으로써 ‘해고 없이’ 인건비를 절감했다. 2005년 575명의 1년 치 임금은 대략 267억 원이므로 인건비는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 정도 만큼 남았다고 해야 맞다. 아니나 다를까, 2005년도 방위비분담금 중 한국인 인건비 배정액은 3,241억 원이었는데 이 중 367억 원이 다른 용도로 이용, 또는 전용되었다. 인건비는 부족한 게 아니라 남았다는 증거다.

2006년도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예산은 2,874억원으로, 2005년 예산 3,241억원보다 367억원이나 줄여 잡았다. 이것도 인건비가 부족하지 않다는 또 하나의 증거다. 주한미군의 규모가 1만 명 가까이 줄어들어 따라 주한미군 1인 당 방위비 분담금이 2004년 1,966만 원에서 2006년에는 2,413만 원으로 2년 사이에 22.7%나 증가했다. 결국 미 측의 자금난 부족 운운은 엄살이고 거짓말이다. 외통부는 이 사실을 몰랐을까? 몰랐다면 무능함과 무책임함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고 알고도 미측을 두둔한 것이라면 매국통상부, 대미조공부로 이름을 바꾸어야 한다.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불법사용!]

7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안(국회비준 전이니 아직 ‘안’이다)의 가장 큰 문제는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사용된다는 점이다. 벨 사령관은 지난 1월 18일, 외신기자클럽 연설에서 “방위비분담금은 우리가 건물을 짓는데 쓴다. 이 방위비분담금은 미 2사단을 서울 이북에서 평택

으로 이전하는데 주로 쓸 계획으로, 여기(미 2사단 이전)에 사용될 돈의 규모는 대략 방위비 분담금의 50%다”고 밝혔다.

용산 및 미 2사단 기지 이전비가 10조원이 넘을 것이라는데 이렇게 되면 용산 미군기지 이전비용도 한국민이 내고, 미 2사단 이전비용도 우리가 내게 된다는 이야기다. 2005년에 이미 라포트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국은 이전비의 6%만 낼 것이라고 한 말이 사실로 확인되는 셈인데,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이 적다며 왜 그토록 불평불만과 위협을 일삼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진다.

그런데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을 기지이전비로 사용하는 것은 미 2사단 이전에 따른 한미 사이의 비용 분담을 규정한 연합토지관리계획(LPP)협정 위반이다. 2004년에 한미 양국 정부가 합의하고 우리 국회가 비준한 LPP협정은 미국이 23개 기지의 대체시설 건설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을 기지이전비로 쓰겠다는 것은 국가간 협정을 어기고 자신들이 내야 할 비용을 한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며 우리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는 오만방자한 행태다. 게다가 이는 방위비분담 협정을 LPP협정과 별도의 이중적인 기지이전협정으로 둔갑시키는 불법행위다.

그런데 기지이전에 관한 용산/LPP협정 체결 당시 ‘원인제공자 부담원칙’에 따라 용산기지 이전비용은 한국이, 미2사단 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키로 했다고 여러 차례 밝힌 국방부는 기존의 주장을 번복하여 “미군기지 이전 협상 처음부터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기지건설을 위해 쓴다는 것을 전제했다”며 말을 바꾸었다. 이는 국방부가 처음부터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을 기지건설비로 쓴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협상에 임했다는 이야기다. 결국 국방부가 국회와 국민을 고의로 속여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하도록 만들어 국익 손실의 주 책임자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니 응당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지사다.

국방부는 여기에 한 술 더 떠서 “방위비 분담금도 미국에 일단 준 돈”이므로 “집행내역에 관여할 수도 없고, 하지 않는 걸로 돼 있다”며 기지이전비 전용을 허용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천만에! 방위비분담금은 우리 돈이다. 방위비분담금은 국방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며 예·결산이 예산회계법과 같은 우리 국내법에 따라 이뤄진다. 방위비분담 예산의 이용, 전용과 결산이 국내법에 따르는 것은 방위비분담금이 한국 돈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국방부가 미국의 불법을 합법화시켜주는 데 앞장서는 것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우리 국익과 국민쯤은 얼마든지 내팽개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 만큼, 국회의 할 일은 분명하다. 불법적인 7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안을 비준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가 정부의 불법을 용인하는 것일 뿐더러 자신이 비준한 LPP협정을 스스로 기만하면서 불법의 공범자가 되는 것이다.

[국회의 조약 비준 동의권, 예산 심의 확정권을 꺾테기로 만들어!]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은 국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부담을 최대한 경감시키기 위한 국회의 권한이다. 국회가 책임 있게 이 권한을 행사하려면 방위비분담금이 어떻게 얼마나 제대로 쓰이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런데 7차 방위비 분담 협정안에는 항목별 분담금액은 없고 총액만 나와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그 동안 여러 차례 지적된 것인데, 이번 7차 협정안에 대한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각 항목별 분담금액을 국방부 결산 자료를 통해 사후적으로 제공받을 뿐 동의과정에서는 총액 규모 이외에 사업 항목별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문제가 있다4)”면서 그 개선을 촉구하였다.

이 같은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채 7차 특별협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주한미군이 자의적으로 방위비분담금을 미 2사단 이전비용으로 전용하는 불법적인 집행은 통제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국회의 조약비준 권한은 껍데기일 뿐 국회는 정부의 협상안을 추인하는 기관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또한 방위비분담금은 다른 국방예산과는 달리 조약이 성립해야만, 즉 국회에서 비준이 완료된 후에야 지출할 수 있다. 그러나 2007년도 방위비분담 예산은 이미 2007년도 국방예산에 포함되어 국회를 통과한 상태다. 국방부는 협상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2006년도 방위비분담 예산액 6,804억원을 2007년도 방위비분담금으로 책정하여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는 이에 대해 아무런 검토 없이 통과시켜 주었다. 그러니까 국회는 2007년도 방위비분담금을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행정부의 편법, 불법행위를 합법화시켜준 셈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방위비분담금은 늘 이런 식으로 협정안이 비준되기도 전에 국방예산에 ‘끼워넣어’서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런 식으로 하여 국회의 전문적인 예산 심의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방위비 분담예산을 국방비에 계상한 것이나 방위비분담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 7차 특별협정 비준안을 심의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 확정권과 조약의 비준동의권이 껍데기에 불과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통외통위 법안소위의 부대의견]

평통사는 지난 2월 2일 벨 사령관이 방위비분담금을 기지이전비로 사용하겠다는 발언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국회비준 반대 투쟁의 포문을 열었다. 국회 토론회, 비준 동의 거부 및 재협상 촉구 청원, 정당 사회 각계인사 1, 2차 선언(1,325명) 발표, 통외통위 방청 투쟁, 통외통위 및 법안소위 등 연인원 백 여 명에 달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의견서 전달, 통외통위위원장 면담, 집회와 수차례의 기자회견과 릴레이 1인 시위, 언론 기고 등 제한된 역량으로 끈질기게 집중적인 투쟁을 벌여냈다.

그 결과, 지난 2월 27일 통외통위 법안소위는 비준안을 통과시키면서 매우 중요한 의견을 첨부하였다. 법안소위 전체의견으로 제출된 부대의견에는 “정부는 종래의 입장을 반복하여 방위비분담금이 기지이전비용으로 집행되고 있음을 시인”했다고 밝힘으로써 국방부가 방위비 분담금을 미 2사단 이전비용으로 사용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는 주장이 근거 없을 뿐 아니라 불법적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분담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LPP협정)이 별개임에도 불구하고 분담금으로 기지이전비용을 충당하는 것은 불합리함은 물론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미측과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다. 법안소위 전체의견에는 또한 “방위비 분담금 관련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후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여 국회의 예산 심의 확정권이 침해되는 절차적인 문제”를 “엄중히 경고”하고 “미국과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토록 요구”했다.

이 통외통위 법안소위의 부대의견은 평통사 투쟁의 작지만 소중한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의견이 실현되려면 국회 비준을 유보하고 방위비분담 항목 중 미 2사단 이전비용으로 사용될 군사건설비와 연합전력증강비(CDIP)를 삭감해야 한다. 그리고 이 삭감안으로 재협상하도록 정부에 촉구해야 한다. 그러나 통외통위는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비준동의안을 의결한 후 본회의에 제출했다. 이는 결국 정부의 불법을 용인하겠다는 이야기다. 답답한 일이다.

[4] 7차 협정안 국회비준 반대! 50% 삭감안으로 재협상!

지금 7차 특별협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다. 곧 국회가 열리고 처리가 되겠지만 국회에서 비준이 된다 해도 이번 협정안의 불법성은 해소되지 않는다. 7차 협정안은 유효기간이 올해 1월부터이기 때문에 비준이 된다 해도 비준시점까지의 모든 지출은 불법 행위다. 국회는 비준에 앞서 이에 대한 대책부터 세워야 한다. 또한 국회는 그 동안 방위비 분담금을 불필요하게 낭비하고 불법 사용한 정부의 행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은 채 비준안을 처리한다면 국회는 정부의 불법을 방조하거나 묵인하는 것이며 예산회계법과 같은 자신의 헌법상 권한과 책임을 훼손하고 포기하는 것이다.

● 방위비분담금을 낭비하고 불법 사용한 대표적인 사례

① 2006년도 군사건설사업 목록(아래 표)에 평택 미군기지의 '부족한 군인 종교시설 신축'(4백만달러), 군산 미군기지의 '교회 및 교회 교육관 신축'(550만달러), 150만 달러가 소요되는 평택 미군기지 내의 취미·운동시설 건축 등이 들어있음. 건축비를 평당 400만원으로 치면, 40~55억 원이면 1,000~1,200평 규모. 부지가 무료로 제공되는 것을 감안하면 교회가 얼마나 초호화로 지어지는지 짐작됨. 그런데 이 교회신축은 회계연도가 이미 지난 2007년 1월 23일 현재 집행되지도 않고 또 평택 교회의 경우 교회를 신축할지 말지 논의 단계라고 함. 이는 목적 외 사용 금지를 정한 예산회계법을 위반한 것이며 일단 돈을 확보해두자는 미측의 계산을 알 수 있음.

② 아래 표에서 보듯 주한미군이 철수한 부대를 위해 따로 또 막사를 짓는 것은 대표적 낭비. 학교시설, 주차 구조물, 경계시설 보완공사 등도 군사시설에 아예 해당되지 않거나 특별협정을 통해서까지 미군을 지원해야 할 이유가 없는 시설들로 미군에 대한 지나친 특혜.

<2006년도 현금 군사건설사업 목록>

③ 2005년도 방위비 분담 예산 중 2006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980억원이며 이중 대상사업을 선정하지 못해 이월한 군사건설비와 CDIP사업비가 390억원임. 예산회계법(국가재정법)상 '대상사업 선정 지연'으로 인한 차년도 이월은 명백히 불법이월임.

<2005년도 방위비 분담금 이월 현황 및 사유>

이상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방위비분담금 항목 중 군사건설과 CDIP는 불필요하게 낭비되거나 미군기지 기지이전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최소한 이 두 항목은 폐기, 삭감되어야 한다.

그럼 어디에서 얼마나 삭감할 수 있을까? 표로 알아보자.

<2007년 방위비 분담금 삭감 항목과 근거>

① 인건비 부족 주장은 허구이므로 2007년 증액된 451억 원은 전액 삭감돼야 함.

② 군사건설비는 그 소요가 미군기지 이전(용산과 미2사단 이전)사업과 대부분 겹칠 수밖에 없음. 따라서 군사건설비를 계속 지원하는 것은 결국 미군기지 이전비용의 이중부담을 하는 결과로 됨. 또 앞 표에서 보듯 방위비분담금 가운데 대표적인 낭비사업이고 특별협정으로 보장해야 할 명분이 없는, 지나친 미군 특혜사업임.

③ CDIP 사업비는 군사건설비와 동일한 개념으로 이 항목을 별도로 둔 것 자체가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한 구실에 불과함. CDIP사업의 취지는 한미공동사용시설 투자이나 실제로 한미공동사용시설에 대한 투자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움.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기로 한미가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한미연합사가 해체될 것이므로 한미군 공동사용 시설도 불필요하게 될 것임.

이렇게 삭감하면 2007년도에 우리가 미군에 지원할 방위비분담금은 7,255억원이 아니라 3,589억원이다. 이 삭감안으로 우리 정부가 미국과 재협상에 나서는 것! 이것이 국익과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최소한의 요구다.

[5] 특별협정 폐기하여 국민 부담 줄이고 한반도 평화체제로 나아가자!

방위비분담금 외에도 우리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지원비는 2007년에만 미군기지 이전비용 7,449억 원, 시설부지지원 184억 원, 이라크 파병 740억 원 등을 합쳐 8,373억 원에 이른다. (방위비분담금을 합하면 1조 5,628억원이나 된다.)

미군기지 이전은 주한미군의 지역 기동군으로의 전환을 위한 이전이어서 당연히 미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인데도 우리 국민들은 2012년까지 매년 1조원 이상을 기지이전비로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는 최소 5,000억원으로 예상되는 환경오염치유비용, 평택 미군기지 성토비용, 미군기지 주변 주민대책비 등이 빠져있다. 이처럼 천문학적인 미군기지 이전비용 부담에다 방위비 분담까지 대폭 증액한 것은 한국민의 부담은 안중에 없는 미국 중심의, 일방적인 미국 이익 챙기기다.

방위비 분담금의 미2사단 이전비용 전용에 대한 국민의 비판 여론이 일자 국방부는 방위비 분담 결정방식을 소요충족 방식으로 바꾼다느니 현물지급 비율을 늘린다느니 하며 몰타기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방위비 분담금의 미군기지 이전비용 전용은 한국 정부가 동의해 주지 않는 한 집행될 수 없는 것으로, 집행상의 문제나 방위비 분담 결정 방식의 문제는 아니다. 또 현재 인건비, CDIP, 군수지원, 군사건설 또한 기본적으로 사업소요에 기초한 분담 방식이므로 도리어 한국의 부담을 더 늘리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 현물지급이 늘어난다 해서 방위비 분담 자체의 굴욕적 성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또 방위비 분담 규모가 주는 것도 아니다.

주한미군이 한국방위 위주에서 지역 기동군으로 그 역할이 바뀌게 된 조건에서 방위비분담금은 한국 방위와는 관계없는 주한미군의 지역 기동군 임무에 쓰일 개연성이 높다. 만약 방위비 분담금이 주한미군의 지역 기동군 역할에 쓰인다면 우리나라는 주한미군의 지역분쟁 개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꼴이 된다.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상 주한미군의 임무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의 한국 방어 임무에 한정된 것을 위배하는 불법 사용을 우리 스스로 인

정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 교란자 역할을 우리 스스로 자임하는 결과로 된다.

방위비분담금이 주한미군의 지역기동군 임무에 쓰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방위비분담금은 대폭 삭감되어야 하며 중단되어야 한다. 방위비 분담의 근거가 되는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은 한미소파에 어긋날 뿐 아니라 미 2사단 임무의 한국 이양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국방개혁 2020 추진으로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른 ‘한국군의 주도적 한국방위’에도 맞지 않는다. 그런데 미국은 7차 협정안에 “한미동맹에 대한 굳건하고 상호적인 의지라는 목표를 인식” 운운의 구절을 집어넣음으로써 방위비 분담의 영구화를 피하고 있다.

그러나 미군 주둔은 ‘한미동맹’이 아니라 오로지 미국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우리가 미국한테 방위비 분담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받아야 하는 것이 시대의 순리다. 또한 미군의 한반도 영구주둔을 의미하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 영구화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는 정면에서 위배된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우리나라의 불필요하고 과도한 안보비용을 줄이는데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6차 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전망이 가시화하고 있는 만큼 구태여 우리나라가 비싼 방위비 분담금을 치르면서까지 미군에 대한 굴욕적인 의존을 계속해야 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 지금이야말로 현대판 조공인 방위비 분담을 폐지하고 적극적으로 남북 화해와 평화군축으로 나가야 할 때다.

이에 평통사가 앞장서서 방위비 분담 대폭삭감과 협정 폐기를 위한 국민적 운동을 힘차게 벌여내자.

1) 이 글의 주요내용은 2006년 12월, 평화통일연구소가 국회 국방위에 제출한 ‘미국의 방위비분담 요구의 문제점과 대안’ 연구보고서를 인용하였다.

2) 황일도, ‘주둔비 부족하다는 주한미군, 금융권에 8천억 예치, 운용-잠자는 한국방위비분담금. 날린 이자만 1000억’ 신동아 07년 4월호, 82쪽

3)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이다.

4) 국회 통외통위 수석전문위원의 “7차 특별협정 비준동의안 검토보고서”(2007.2),12쪽

| 현장 |

효순이 미션이의 한(恨)이 맺힌 곳,
파주 무건리 훈련장

글·사진 : 회원사업팀 정동석

제 2의 평택 대추리, 도두리

의정부에서도 버스를 타고 45~50분 거리를 달리다 보면 5년전 효순이와 미션이가 미군 웨도 차량에 의해 꽃다운 생을 마감한 곳. 그곳에서 다시 버스로 두 정거장을 지나면 <무건리 훈련장 확장 반대 주민대책위원회>의 작은 컨테이너 사무실이 나온다.

지난 2월 28일, 마을 주민들은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마을 입구 삼거리에서 척사대회를 진행하였다. 한쪽에서는 윷놀이가 열리고 고기를 굽고, 다른 한쪽에서는 군용트럭과 탱크들이 굉음과 흙먼지를 날리며 윷놀이 말판을 밟고 지나고 있다. 외지인의 당황스러운 표정과 달리 주민들은 탱크 행렬과 소음에 익숙해진 표정이다.

윷놀이 말판을 밟고 지나는 탱크! 이 한 장면이 지난 25년간 이곳 주민들이 어떠한 고통을 당하며 살았는지를 알게 해 주었다.

무건리 훈련장은 우리나라 연대급 이상이 훈련할 수 있는 두 개(무건리, 인제 통천)의 훈련장 중 하나이다. 지난 1982년 당시 전두환 정권은 350만평에 달하는 종합군사 훈련장을 만든다며 파주시 법원읍 무건리, 직천리 주민들을 강제로 쫓아내고 현재의 무건리 군사 훈련장을 만들었다. 당시 무건리에 살던 다수의 주민들은 훈련장 주변의 오현리로 이주를 하였고, 국방부는 계속해서 훈련장을 넓혀갔다. 그러다가 1996년 이후 파주시 적성면 무건리, 법원읍 직천1리·2리, 오현1리·2리, 양주시 광적면 비암 1리·2리에 이르는 1100만평¹⁾으로 확장하는 대규모 군사 훈련장 확장이 추진되고 있다.

국방부는 훈련장 확장 사유²⁾와 관련해서 “수도권 일대는 부대유형 다양성, 훈련대상 부대(160개 부대)가 많으나 수도권 개발 계획 및 훈련장에 대한 주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부지확보 제한”이 많다는 것이다. 현재 “육군에는 20개의 기갑, 기계화여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26개의 기계화여단을 보유하게 되나, (북, 중국 등) 가상 적들에 비해 수적으로 열세의 여단을 보유하고 여단급 기계화 부대가 훈련 할 수 있는 훈련장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부대 구조, 무기체계 발달, 전투수행 교리발전으로 실질적인 훈련여건 보장을 위해 훈련장 확장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요구되는 보병 사거리는 10×20km이나 현재 훈련장 여건은 사거리 4km 이내 사격훈련으로 훈련성과 저조”³⁾하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무건리 훈련장에 대한 관리 부대인 육군 1군단은 “공인된 2개 기관이 감정평가 후 평균금액 산정과 토지소유자 요청 시 감정평가사 1개 기관 추가선정으로 보상함은 물론 주민 이주대책은 1단계(07년) 기본계획 수립 후 2단계 이주단지 매입(08년), 3단계 실시설계(09

년), 4단계 이주단지 조성(10년)으로 오는 2010년 12월까지 택지조성을 완료”, “이주단지 조성은 2008년에 특별회계 편성으로 공적자금 등을 투입하여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할 계획”(과주 타임스), “오현리 주민들이 다시 농사를 지으려면 약 104만평의 넓은 땅이 필요한데, 우리 군이 군사 목적의 땅을 제외한 군용지를 알아본 바로는 대토할 땅이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주하신 다음에 텃밭 정도는 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1군단 관계자)고 밝혀 오현리는 제 2의 평택 대추리, 도두리가 예견되고 있다.

효순이 미션이의 한(恨)이 설인 바로 그곳!

무건리 훈련장(트윈 브릿지)은 어유지리(클라우스), 다락대(세인트바바라) 및 오가리(그릭 벨리)와 더불어 1997년 10월부터 미측의 요청(4)에 의해 연간 13주(91일)가 미군에게 제공되는 한미공동훈련장이다. 그리고 2004년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의해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37개 공용 훈련장으로 재차 합의된 곳이다.

한국군도 모자라 미군 탱크까지도 이곳 무건리에 와서 실탄 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2002년 이곳 무건리 훈련장에서 훈련을 마치고 2사단으로 돌아가던 미군 퀘도 차량에 의해 효순이와 미션이가 죽음을 당함으로써 두 여중생의 한(恨)이 서린 곳이다. 군 훈련장이 확장되고 더 많은 대규모 군사 훈련장이 진행 된다면 제 2, 제 3의 효순이 미션이는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우리는 무건리 훈련장 확장 조성사업이 백지화됐으면 좋겠다는 입장”

20여년간 정부와 국방 당국의 국가안보라는 미명아래 진행된 훈련장 확장 계획은 주민들의 삶을 철저히 목 죄어 갔다. 특히 96년 훈련장 확장 고시 이후 이 마을은 군사보호구역, 개발제한지역으로 설정돼 축사 하나 증·개축하는 것조차 군부대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수년간 계속돼 온 인도 설치 요구도 철저히 묵살되어 왔다. 주민들의 요구 묵살은 결국 효순 미션이의 죽음을 낳았고, 효순이와 미션이의 죽음 이후에는 사고 지역 일부만 인도가 설치되는 기만적인 일들이 진행되었다.

각종 인허가 규제는 내 집 수리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절망의 마을로 고착시켰다. 국방부는 서서히 마을을 폐쇄화시킴으로써 주민들을 자포자기시켜 스스로 마을을 떠나도록 하고 집과 토지를 헐값으로 빼앗는 방식으로 훈련장을 확장해 온 것이다.

군 당국의 비상식적인 훈련장 확장 계획에 맞서 드디어 주민들은 2006년 <무건리 훈련장 확장 백지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오현리 청년회를 <오현리 지킴이>로 재편하여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다.5)

주민대책위는 ‘훈련장 확장 중단’,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각종 인허가 규제 해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인도 개설’, ‘군 전차 차량 이동을 위한 우회 도로 개설’, ‘지난 수 십년간 일어난 훈련 중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무건리 훈련장 확장은 한반도 평화 통일에 역행하는 것

국방부는 20여 년 간의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무건리 훈련장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무건리 훈련장 확장은 사실상 주민들의 땅을 강제로 빼앗는 것으로 중단되어야 한다.

1982년 정부는 주민들의 의사 한번 확인하지 않고 파주시 법원읍 직천리, 무건리 250여 세대 주민을 쫓아내고 강제적으로 군사 종합훈련장을 건설하였다. 당시 주민들은 살벌한 군사 정권에 항의 한 번 못하고 조상대대로 살아온 땅을 빼앗기고 말았다. 지금 오현리 주민 상당수는 25년 전 ‘무건리 연대 전술 훈련장’ 건설로 무건리, 직천리에서 쫓겨난 주민들으로써 이들을 또다시 자신의 터전에서 쫓아내는 비인도적인 일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 20여년을 정부의 ‘국가안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된 파주 오현리 주민들의 인권침해와 고통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이다.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고통을 강요하는 ‘무건리 연대 전술 훈련장’ 확장 사업은 중단 되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 통일의 관점에서도 무건리 훈련장은 축소되어야 한다.

파주 무건리 훈련장은 분단의 아픔과 통일 염원의 상징인 도라산역(파주시 장단면)을 지척에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개성까지는 직선거리 45km에 불과한 거리이다. 이러한 곳에 대규모 군사 훈련장을 확장한다는 것은 결코 남북화해와 통일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중단되어야 한다.

‘무건리 훈련장’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무관치 않다. 헌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위반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기초한 무건리 훈련장 확장은 중단되어야 한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기초한 기지 성격의 변화, 군사 변환과 그에 따른 무기체계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훈련장 확장을 요구하고 있다. 무건리 훈련장의 확장은 바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기초한 무기체계의 발달, 변화에 따른 것임이 명확한 것으로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한국은 LPP 협정에 따라 ‘공동사용’을 위해 훈련장 내의 시설과 구역을 내어주어야 할 뿐 아니라 훈련장과 미국이 보유하는 모든 훈련시설과 구역의 주변에 대해서까지 관리하게 되어 있다.

이처럼 한미공동사용 훈련장의 경우 미군의 사용권한이 전용 공여지와 다를 바 없는데다가 운영유지비용까지 한국이 떠맡음으로써 부담을 한국에 전가시키는 것은 뻔한 일이다. 이는 미군이 자신이 부담해야 할 운영유지비를 주둔국에 부담시키는 ‘특별협정 분담금’처럼 주한미군이 자신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둔국에 그 부담을 전가하는 또 다른 형태의 ‘비용 분담’이라 할 수 있다. 즉 주한미군의 훈련장 공동 사용 의도는 단독사용에 따른 관리책임에서 벗어나 각종 비용과 민원, 환경오염 치유책임 등을 우리 정부에 떠넘기려는 것이다.

올 해는 효순이 미선이가 미군 퀘도 차량에 의해 목숨을 잃은 지 5주년이 되는 해이다. 당시 중학생이었던 두 여중생이 살아 있다면 지금쯤 어엿한 성년이 되어 대학에 들어 갈 나이이다. 지난 5년 전 손에 촛불을 들고 ‘여중생의 한을 풀자’며 외쳤던 그날의 함성이 오늘 우리에게 ‘무건리 훈련장의 확장을 막아내는 것’으로 다가오고 있다.

오키나와 및 일본본토에서의
미군재편계획 진행상황과 민중투쟁 현상

글 아시아공동행동(AWC)일본연락회의 도요타 유키하루
번역 아시아공동행동(AWC)일본연락회의 나가야 유키코

들어가며

작년 11월 ‘아시아에서 미군 총철수를 요구하는 이와쿠니 국제집회’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동지들께 이와쿠니를 비롯하여 오키나와, 그리고 일본본토에서의 미군재편 상황과 이에 대한 민중의 투쟁 상황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대략적으로 말하면 작년 11월 이와쿠니 집회 직후부터 이와쿠니를 비롯한 전국의 미군재편 대상지역에 대해서 일본정부의 악랄하기 짝이 없는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오키나와 현지사 선거에서 이토카즈 후보가 패배했다는 것이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내년도 예산편성 시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미군재편 촉진을 위한 예산안과 이 예산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법 정비를 국회에서 예산안 통과 전에 마쳐야 한다는 사정 때문에 정부는 아주 당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군기지와 자위대 기지가 있어서 미군재편 대상이 되는 지역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 성공시킬 수 있었던 이와쿠니 국제집회의 의의는 참으로 컸다는 것을 다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쿠니 기지 대강화를 둘러싼 상황

첫째, 일본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이와쿠니 시청 청사 건설을 위해 지난날에 약속했던 정부 원조금을 중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액으로는 35억 엔. 이는 10여 년 전부터 이미 약속되었던 것으로, 오키나와 후텐마기지의 공중급유기부대를 이와쿠니로 이주시킬 담보로 보조금을 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설공사가 진행 중인 지금에 와서 갑자기 그 약속을 전면적으로 파기한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이와쿠니 기지에 대한 아즈기 기지(가나가와)의 항모함재기부대 이주 반대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이하라 시장에 대한 압력일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이와쿠니 시민에 대한 협박이기도 합니다.

SACO(오키나와에 관한 일미행동위원회)의 합의-후텐마기지 공중급유기부대 이주에 따라서 이와쿠니시에 보조금을 냈습니다. SACO가 아니라 후텐마기지 공중급유기부대는 미군재편 ‘일미 로드맵’에서 이와쿠니로 이주하지만 훈련은 해상자위대 가노야기지(가고시마현)나 괌에서도 실시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산은 SACO가 아니라 미군재편 관련예산에 편성 됩니다. 그러니 ‘이하라 시장이 이 미군재편안 중 함재기부대 이주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보조금을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내세울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런 정부의 수법에 대해 이와쿠니 시민은 물론 전국의 민중들은 ‘약속 위반’, ‘나라가 하는 일에 반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왕따’라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이와쿠니 시장은 이러한 압력에 굴하지 않고 ‘새로운 기채’를 모집하여 독자적으로 시청사 건설 공사를 계속할 것을 결단했습니다. 이와쿠니 시민의 부담이 커도 정부의 압력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사례를 이와쿠니 시와 이와쿠니 시민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정부가 야마구치 현까지 끌어 들어서 이와쿠니 시장에겐 생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아타고야마(이와쿠니 기지를 내려다볼 수 있는 산 이름)를 허물어서 시민을

위한 주택지를 조성하는 공사에 관해서, 이제 막 택지조성공사를 시작하려는 시점인데 야마구치 현은 택지조성을 해봤자 주택이 팔릴 전망은 없고 적자만 누적해갈 것이라며 공사를 중단하자고 하더니, 재빠르게 공사중지를 결정하고 말았습니다. 이 공사는 야마구치 현과 이와쿠니 시, 그리고 야마구치 현 주택공급공사의 공동사업이었습니다. 공동사업주의 일부인 야마구치 현이 ‘장래의 적자’를 이유로 사업을 철회하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이 문제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야마구치 현 지사는 정부에 잘 보여서 아타고야마 개발을 도중에서 중지하고, 조성 전인 황무지를 그대로 정부에 전매하려고 하는 것이고, 정부는 그것을 구매하여 이와쿠니 기지 확장 후에 미군병사들의 주택을 건설하자고 도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한 주체인 이와쿠니 시의 아타고야마 개발 사업을 계속하려는 의사는 무시한 채 야마구치 현 당국과 니이 지사가 자기 멋대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사업을 진행해도, 중지해도 적자가 날 전망이며 그 적자액은 200억 엔 내지 300억 엔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하필 그 황무지를 (중앙)정부가 -약점을 기화로 삼는 방식으로- 매입하여 미군용 주택을 만든다는 것은 이와쿠니 시측의 약점을 악용하여 시가지, 그것도 주택지 한가운데에 기지확대를 하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러한 짓을 정부와 야마구치 현 당국이 짝짜꿍이 되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 이와쿠니 시민들은 더욱더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타고야마 주민들은 그 총의로 ‘아타고야마에 미군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절대로 반대하겠다’는 의사를 이와쿠니 시민에게 전했습니다. 이를 받아 이하라 시장도 더욱 기지강화 반대 의사를 공고하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외에도 정부나 야마구치 현은 돈과 권력으로 이와쿠니 시에 중압을 가하고 있습니다만 작년 이와쿠니 시민투표로 보여준 이와쿠니 시민 압도적 다수의 민의- ‘더 이상의 기지 강화에는 반대한다’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 일주년인 3월 10일에는 그동안 정부가 취해온 수법을 규탄하는 목적으로 이와쿠니 시민집회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무라 이와쿠니 시의원님, ‘주민투표의 성과를 살리는 이와쿠니 시민의 모임’ 오오카와 기요시 대표를 비롯하여 이와쿠니에서 투쟁하는 분들도 바로 지금이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투쟁을 강력히 추진하고 계십니다.1)

가나가와에서의 투쟁

가나가와에서는 캠프 자마에의 미 1군단 사령부 재편 이주 문제, 그리고 ‘일미 로드맵’에서 기술된 일은 아니지만 미군재편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 요코스카 미 해군기지를 원자력항모 ‘조지 워싱턴’의 모항으로 하려는 문제가 있습니다. 캠프 자마 문제에 대해서 이 기지가 있는 사가미하라 시, 자마 시는 기지 일부분이 반환되기도 해서 ‘일미 로드맵 반대’ 목소리를 크게 내기에는 좀 힘든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기지기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경계심이나 반대의사는 분명히 견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2월8일)에는 미 1군단 사령관 중장이 캠프 자마에의 재편사령부 이주와 관련해서 신설될 ‘전투지휘훈련센터’에 대해서 “태평양 역내에서 아주 고도의 시뮬레이션 센터라고 보고 있다. 일미의 상호운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주 유효하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발언은 캠프 자마로 재편 이주하는 미 1군단 사령부가 아시아태평양지역 전체를 커버하는 작전사령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시하는 발언입니다. 이 계획에 대한 반대운동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3월 17일에는 “필요없다! 제 1군단. 이의 있다! 미군 재편법 - 사가미하라와 자마를 잇는 3/17 시민행동”이 많은 노동자와 시민의 참여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요코스카의 원자력 항모 모항화에 대해서 이미 요코스카 시장은 이를 용인했지만 시장의 공

약위반을 지탄하고 원자력항모 모항화를 반대하는 투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코스카 시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의 직접적인 의견과 판단을 묻는 주민투표 조례를 마련해야 한다며 서명운동을 했습니다. 작년 11월 이와쿠니 국제집회 직전에 시작된 이 주민투표조례 제정요구 서명(유권자의 50분의 1로 조례제정을 결정할 시의회가 개최될 수 있음)에서는 순식간에 조례제정 청구에 필요한 숫자인 7,114명의 5배가 넘는 41,691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 중 유효한 서명은 37,858명. 전체 유권자 355,663명 중 9명에 1명 꼴로 서명과 날인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부당하게도 요코스카 시의회가 이를 부결하고 말았지만 조례제정을 위한 시민들의 의사는 2월 4일에 약 450명이 모인 ‘히토모지(사람이 모여서 어떤 글자모양을 만드는 것임) 행동’ 등을 통해서 급속히 확산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민 3명이 모항화에 따른 항만 준설공사 중지를 요구하는 재판을 일으키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와쿠니 기지 강화와 관련해서 아즈기 기지 함재기부대가 이와쿠니로 이주하게 되어도 아즈기 기지에서 함재기 사용 실태가 전혀 변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도 폭로되기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오키나와

이번 미군재편에서 미일정부는 미군기지가 집중적으로 있는 오키나와의 ‘부담 경감’을 선전문구로 외쳐 왔습니다만 ‘일미 로드맵’ 이후 오키나와의 현실은 정부의 선전과 정반대로 부담이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극동 최대규모인 미 공군 가테나 기지에 패트리엇 미사일(PAC III) 배치 강행, F-15 전투기가 야간과 새벽에 이착륙하며, 돌연한 낙하산 강하 훈련(이에지마 섬에서 실시함을 결정했는데도), 게다가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22 배치 강행 등 빠른 속도로 기지 강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F-22 배치는 ‘태평양지역에서의 순환 배치의 일환’으로 이후 주한 미공군, 꺾을 순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텐마 기지 폐쇄문제, 그리고 헤노코자키 대체 신기지 건설문제는 이미 ‘2개의 V자형 활주로’가 있는 신기지를 캠프 슈워브 연안부와 오오우라 만에 걸쳐 건설할 계획으로 일단 ‘합의’가 된 상태인데, 이제 와서 위치를 앞바다로 이동시키는 문제나 활주로의 길이 문제 등 정부 생각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후텐마 기지가 있는 기노완 시나 이 헤노코자키 신기지 건설용지를 갖고 있는 오키나와 북부지역에서도 미군용 조명탄 등이 대량으로 댐에 투기된 사태가 발각되었고, 오오우라 만에서의 낙하산 강하훈련, 또는 헬리패드(헬기 이발착대) 신설문제 등 기지강화와 그에 따른 피해의 확대만이 연속적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이 헤노코자키 신기지 건설에 관해서는 오스프레이(수직이착륙기) 배치도 기정사실이라는 것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이러하여 일본정부가 자주 하는 선전문구인 ‘오키나와의 부담경감’이라는 말과는 정반대로 기지강화와 오키나와 주민에 대한 기지피해 강화만이 진행되고 있다는 미군재편의 본질이 드러나면서 오키나와 민중들의 분노는 한계점에 달하고 있습니다. 헤노코자키 신기지 건설에 대해서는 해상 저지행동을 포함한 투쟁이 착착 준비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15일(오키나와가 일본본토에 반환된 지 35주년)을 전후해서 다양한 투쟁이 오키나와에서 벌어질 예정입니다. 5월 13일에는 가테나 기지 포위 인간띠잇기 행동이 2만 여명의 참여로 실현되려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AWC 일본연락회의도 참여하여 함께 투쟁할 것입니다.

끝으로

대략 위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금 진행 중인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과 미군재편을 위한 법안 통과를 서두르고 있는 일본정부는 재편 대상이 되어있는 일미 군사기지 소재지에 대해서 대단한 압력을 가하며 ‘합의’를 얻어내려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미 로드맵’부터 약 10개월 정도가 지났지만, 지금도 완전히 ‘합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55개 지방자치단체 중 16개 정도는 아직도 ‘합의’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미 로드맵’의 내용이나, 이를 어떻게 진행시키느냐에 대해서 국회에서의 논의도 아직 이틀 동안 질의만 있었을 뿐이며 내년도 예산안에 미군재편 비용을 포함시키긴 했지만 미군재편 계획의 전체 예산이 얼마가 될 지에 대해서는 정부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예산안의 법적근거조차 예산안과 동시에 이번 국회에 제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고이즈미는 ‘아시아태평양의 일미동맹’이라고 말했고, 대를 이은 아베는 ‘세계 속의 일미동맹’이라고 하면서도 실태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일미동맹’ 그 자체가 한쪽의 당사자인 일본정부 쪽에서도 불확실한 요소를 안고 있는 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물론 럽스펠드를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미국 부시정권에서도 불확실한 요소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오키나와와 일본본토에서의 미군재편계획의 진행상황과 이에 끝까지 저항하여 반대하는 민중의 투쟁을 간략하게 묘사해 봤습니다. 우리 AWC 일본연락회의는 투쟁하는 민중들과 결합하면서 미군재편에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강력히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투쟁이 한국의 동지들과 또한 아시아태평양지역 민중들과 함께 벌이는 ‘아시아에서 미군을 총철폐시키자’는 투쟁의 일부라고 확신합니다. 올 가을에는 작년에 이어 이와쿠니 국제 집회를 다시 한번 개최하고자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동지들의 협력을 더욱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후기

그 외 지역에서의 미군재편문제, 가데나 등 주일미공군기지에서 항공자위대기지로 ‘훈련 이전’-일미공동사용화 진행, ‘일미 로드맵’에는 거론되지 않은 요코스카의 원자력항모 모항화와 더불어 아주 중요한 미 해군 ‘사세보’기지 강화나, 원자력항모 등 함선기항문제 - 2월 24일에는 원자력항모 ‘로널드 레이건’이 사세보 기항, 수반하는 함선들도 각지 민간 항으로 분산 기항한다는 동향, 또는 MD(미사일방위)일미협력 동향은 아예 다루지 못했으니 후기로 서 여기에 적어두었습니다 (2007년 2월 23일)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을 한층 가속화하는 한미연합전쟁연습1)

글 : 평화군축팀, 인천평통사 오혜란

1. 들어가며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RSOI/FE)의 전모가 세상에 드러난 적은 없다. 한미연합사는 한미연합연습의 진정한 목적과 성격, 전개양상은 숨긴 채, “연례적인 방어연습”이라는 상투적 주장을 일삼는 한편, 연습에 참가한 미군의 사기(?)와 한국에 배치하거나 팔아먹고 싶은 장비의 일부만을 선택적으로 공개할 뿐이다.

한미 군사당국은 북한 점령 및 정권교체를 군사적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전력구조와 병력 및 작전계획을 갖추고 연합연습을 실시하고 있다. 유엔사/연합사의 작전계획 및 연합연습이 대북 선제공격적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전에도 알려진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길은 없었다.

그런데 2005년 10월 권영길 의원의 폭로로 유엔사/연합사의 작전계획 5027의 작전목적이 ‘북한 정권 제거’ 및 ‘북한 점령’임이 확인되었다. 2006년 3월 만리포 상륙훈련 저지 투쟁은 RSOI/FE 연습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제고시키고, 그 공격적 성격을 대중적으로 폭로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글은 그간의 실천을 통해 확인된 내용을 기초로 RSOI/FE 연습이 김정일 정권제거를 군사적 목표로 하는 대북 공격계획에 따른 전쟁연습임을 밝히고 작전통제권 반환과 9·19 공동성명에 의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이 당면한 과제로 제기된 지금, 대북 공격적 작전계획의 폐기 및 연합연습 저지 투쟁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공동 투쟁을 제고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아울러 이글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동맹의 가치·포괄·광역동맹으로의 전환이 실행단계로 들어서고 있는 지금, 미국의 대북 군사패권전략의 실행력만 높여주는 한미연합연습과 이를 뒷받침하는 연합연습 양해각서, 전시지원협정, 상호군수지원 협정 등 한미연합전쟁연습을 뒷받침하는 각종 불평등한 협정의 폐기의 필요성을 밝히는데 초점을 두고 정리하였다.

2. RSOI/FE 연습은 김정일 정권 제거를 군사적 목표로 한 대북공격연습

1) RSOI/FE 연습과 미 증원전력의 종류

RSOI 연습은 울지포커스렌즈연습(UFL), 독수리연습(FE), 래피드썬더(RT:Rapid Thunder)와 더불어 한미연합사가 주관하는 4대 전구급 주요연습 중의 하나이다2). RSOI/FE 연습은 한반도 유사시 작전계획 5027에 따른 미 증원전력의 한반도 전개절차를 익히는 연습으로서 수용(Reception), 대기(Staging), 전방이동(Onward Movement) 및 통합(Integration) 절차와 이를 지원하는 한국군 동원, 전시지원, 상호군수지원, 연합후방지역조정관(CRAC : Combined Rear Area Coordinator)임무, 전투력 복원절차 연습이다. RSOI 연습은 대표적

인 대북 핵 공격 연습인 팀스피리트연습이 폐지된 1994년부터 시작되어 이듬해인 1995년부터는 한미연합연습으로 되었으며, 야외기동연습인 독수리 연습(FE)과 2002년부터 통합되어 실시됨으로써 팀스피리트 연습의 재현³⁾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RSOI에 따른 미 증원전력의 한반도 전개계획은 작전계획의 실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작전계획 5026, 5027, 5029의 수립 및 발전과정과 긴밀한 연관 속에서 작성되며 작전계획에 요약 포함된다.

미 증원전력의 전개는 위기사태가 고조되어 전쟁이 임박했다고 판단될 시 미국의 국가통수기구의 승인에 의해 시행된다. 증원전력의 전반적 전개이전에 위기 징후의 정도에 따라 신속억제방안(FDO)이 시행되어 전쟁억제를 위한 전투력이 투입되고, 억제가 실패했다고 판단될 시는 전투력증강(FMP)을 통하여 위기사태에 대비하게 된다. 미 증원전력의 종류⁴⁾로는 신속억제방안, 전투력 증강, 시차별 부대전개제원이 있다.

2) RSOI/FE 연습은 김정일 정권 제거를 목표로 한 대북 공격연습

한미연합사는 RSOI/FE 연습이 “연례적 방어연습”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연습을 단순한 방어연습이라고 볼 수 없다. RSOI/FE연습은 한반도 유사시 한미연합군의 전쟁목표와 최종상태, 이를 구현한 작전계획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미연합사인 작전계획 5026, 5027, 5029의 작전목적은 모두 대북 선제공격적 작전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작전계획 5026의 작전목적은 ‘북한의 공격을 서울 북방에서 격퇴’, ‘북한 포병 무력화’, ‘북한의 화생방능력(운반 수단 포함)과 지휘·통제체제의 파괴와 무력화’, ‘작전계획 5027 또는 개념계획 5029로의 전환가능성에 대비’ 등이다.⁵⁾ 이준 전 국방장관은 작전계획 5026에 대해 “적의 심장부를 바로 때리는 계획”이라고 묘사하고 있다.⁶⁾

작전계획 5027-04의 작전목적은 ‘북한군 격멸’, ‘북한정권 제거’, ‘한반도 통일여건 조성’이며 작전계획 5029는 북한 정권 붕괴, 대량살상무기 유출, 천재지변에 의한 긴급재난, 북한 난민 발생 등 북한 내부 사태에 대응한 시나리오이다.

작전계획 5027은 5026과 보완되며, 정밀타격계획인 작전계획 5026에 따라 북한의 공격능력과 지휘통제체제를 선제정밀타격 했을 경우, 북한군이 전면적으로 반격하면 전면전 대비 작전계획인 5027로 전환하고, 북한이 내부 붕괴에 이르면 이에 따른 작전계획인 5029로 전환하는 계획을 입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6년 국방백서에서 묘사된 전면전 대비태세 역시 대북 선제정밀타격전략인 작전계획 5026의 시나리오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만일 북한이 전쟁을 도발할 경우에는 한미연합조기경보체제와 신속한 대응으로 적의 기습을 거부하고, 개전 초부터 적의 장사정포와 미사일 등 핵심전력을 정밀타격 함으로써 조기에 수도권의 안전을 확보하고 전장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수립해놓고 있다. 이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주기적으로 실전과 같은 연합/합동 연습과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⁷⁾

유엔사/연합사의 한반도 전쟁시나리오의 단서와 전제들, 예컨대 작전계획 5026의 “북한의 공격을 신속하게 격퇴하기 위해”와 작전계획 5027의 “대한민국에 대한 북한의 공격을 결정적으로 격멸하기 위해”라는 조항들은 연합사 작전계획이 기본적으로 부시 정권의 대북 선제공격전략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 한반도에 전면전이 벌어진다면 현실적으로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에 따라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별 의미를 갖지 못한다.

유엔사/연합사의 이러한 작전목적은 헌법의 평화통일조항은 물론 국방부가 제시한 국방목표, 곧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 보위’, ‘평화통일 뒷받침’,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 한다는 내용과도 배치된다.

3) 미 증원전력은 한국 방어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미국의 세계패권전략과 대북패권 실현을 위한 전력

미 증원전력의 한반도 전개가 최소한의 설득력을 가지려면 대북 군사력 열세를 전제로, 한국군 독자적으로는 대북 방어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가정위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전쟁 이래 한국군이 대북 방어의 측면에서 북한의 남침을 저지할 수 없을 만큼 열세에 있어 본 적이 없다는 측면에서, 첨단정밀 타격력과 신속기동능력을 위주로 한 대규모 미 증원전력의 한반도 전개는 어떠한 설득력도 가질 수 없다. 주한미군을 뺀 한국군만으로도 북한보다 강하다. 주한미군은 더 이상 한반도에 주둔할 필요가 없는 과잉전력이다. 최근까지 한국군이 북한군보다 열세에 있다고 주장해온 국방부조차 “대북전력이 질적으로는 우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며 기존의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남북의 군사력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8)

국방부의 입장 변화는 그간 진보진영과 연구자들의 주장을 국방부가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주한미군의 철수가 아닌 지속적 주둔과 미 증원전력의 전개를 고집하는 것은 민족이익과 국가이익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과 군사전략에 의거한 대북/ 대주변국 공격적 군사전략과 작전계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특히 미 증원전력이 미국의 세계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전력이라는 사실은 미 군사전략의 변화에 따른 작전계획의 변화 및 이의 실행을 지원하기 위한 시차별부대전개체원의 변화에서도 확인된다. 1990년 대 중반을 전후로 미국의 세계전략과 대북 전략은 크게 변화하였다. 냉전와해에 따른 군사력 감축요구에 직면한 미 국방부는 1993년 BUR 보고서(국방태세 점검:Bottom-Up Review)를 통해 기존 소련을 대신하는 국지적 차원의 분쟁을 새로운 위협으로 지목하고 중동과 한반도 2개의 지역 분쟁에서 모두 승리한다는 원-원전략을 채택했다. 작전계획 5027도 보다 공세적인 개념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 이전까지만 해도 작전계획 5027은 북한의 남침에 대비한 방어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1단계로 전면 남침을 기도하는 북한군을, 2단계로 휴전선 남쪽 20-30km에서 한국군이 저지하면, 3단계로 그 사이 미군이 증원군을 보내 반격(개성정도까지 진격)을 가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미국은 1차 이라크전쟁에 대한 평가를9) 바탕으로 한반도 작전계획을 공세적으로 변화시켰다. '5027-92'에서는 원산 상륙작전과 평양 포위 계획이 포함되었고, 96년에는 일본 기지를 후방기지로 사용하는 계획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98년에는 기존의 방어개념에서 벗어나 선제타격 및 북한정권의 제거를 목표로 한 새로운 개념의 '5027-98'이 작성되었다. '5027-98'은 미군과 한미연합군을 북진시켜 개전 한 두 달 만에 평양을 함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 북측 지역 갭도입구에 야포가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타격을 가한다는 '선제타격'의 논리로까지 발전하였다.

미국은 이라크 전에서 구현한 전쟁개념을 한반도에 적용해 작전계획 5027의 작전목적을 최신화하고 이를 보완하는 작전계획 5026을 완성하였다. 1991년 걸프전에서 시행했던 시차별부대전개 개념을 한반도에 적용한 작전계획 5027이 완성됨에 따라 미 증원전력의 규모도 변화했다. 1990년 초반에 48만 명이었던 미 증원전력은 중반에는 63만 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작전계획 5027-00에서는 이보다 더욱 늘어나 전쟁이 일어날 경우 90일 이내에 69만

명의 병력과 함정 160척, 항공기 1,600여 대를 한반도에 전개하는 것으로 되어있다.10) 부시 정권의 새로운 전쟁개념에 따라 과거 분쟁 예상지역에 대한 대규모 군사력 배치 개념에서 군사력 투사개념(Power Projection)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 미 증원전력도 규모보다는 첨단정밀타격능력과 신속기동능력이 강조되고 있다.11)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2003년 4월 9일, 미러한미동맹(FOTA) 제1차 회의에서 “한반도에 첨단 C4I 체계, AWACS(공중조기경보통제기), JSATRS(합동감시/표적공격레이더시스템), 프레데타(무인정찰기 겸 공격기), U-2기(전략정찰기)등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이러한 무기체계는 적이 아군을 식별하기 전에 격퇴가 가능하며 새로운 작전계획(작전계획 5026)이 완성되면 전통적인 전쟁수행에 새로운 전쟁수행능력이 추가되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아울러 미국은 C4I와 함께 첨단무기가 도입되면 대북 정밀 타격(Surgical Strike)에 있어 가공할 능력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 증원전력의 대북 패권적 성격은 군 관계자들과 보수 관변단체 연구자들의 주장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김성균12)은 한미연합체제가 지향하는 전략적 목표는 한반도의 전쟁억제와 억제 실패 시 연합전력을 적시에 투사하여 결정적 승리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결정적 승리는 바로 북한 정권 제거 및 북한군 격멸을 의미한다. 차두현은 2005년 10월 20일 임종인 의원실 주최의 토론회에서 미 증원전력의 지속적 전개를 보장받기 위해 작전통제권을 환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미 증원전력은 북한 점령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전력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미 증원전력은 전쟁억제라는 한미동맹의 목적, 대한민국 방어만을 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 평화적 통일을 규정한 우리 헌법과 국방목표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불법적인 것이다.

4) 만리포 상륙훈련은 RSOI/FE 연습이 대북 공격연습임을 밝히는 산 증거

작전계획 5027은 1단계 미군의 신속억제전력(FDO) 배치, 2단계 북한 전략목표 파괴, 3단계 북진 및 대규모 상륙작전, 4단계 북한 점령 및 군사통제 확립, 5단계로 한반도 통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13) 이 중에서 만리포 상륙훈련의 시나리오에 해당하는 3단계의 작전의 핵심은 공군, 지상군, 해군 및 해병대의 합동 전력으로 공중우세를 장악한 가운데 한미연합해병대가 동·서해안에 상륙해 제2전선을 구축하고 특전부대의 내륙침투를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평양을 포위하여 김정일 정권을 붕괴시키는 데에 있다.14) 상륙작전은 적 해안에 군사력을 투사하는 공격작전으로 그 목적은 적 중심지역의 주요목표 공격 및 교란 등이다.15) 한반도 유사시 구성되는 한미연합해병원정대는 기존의 상륙작전을 더욱 발전시켜 북한 해안 45Km의 원거리 지점에서 출발한 병력이 해안에 상륙하자마자 곧바로 중심타격목표를 향해 기동하는 초수평선상륙작전에 관한 교리와 무기체계를 개발 중에 있다. 지상군, 해/공군 및 해병대의 합동전은 이러한 상륙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이다.

오마이뉴스에 의해 녹화된, 2006년 3월 30일 충남 만리포 해안에서 진행된 상륙훈련의 가상 상황은 한미연합군이 공중, 해상우세를 장악한 가운데 각 구성군 사령부의 합동작전으로 상륙작전을 실시할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한 후, 연합사령관이 평양점령을 결심하고 북한 서해안(남포)상륙작전을 통해 북한 정권의 중심인 평양을 직접 고립, 압박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훈련 상황을 브리핑하는 훈련통제관의 생생한 육성으로 한미연합해병대에 의한 만리포 상륙훈련이 북한 정권 제거를 목표로 한 작전계획 5027-04에 따라 진행되는 대북 공격연습임을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5) 한미연합연습은 대량살상무기 반확산전략에 따른 선제공격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 WMD 대응전략의 기본이 되는 문서는 2002년 3월에 공개된 핵태세검토보고서(NPR : Nuclear Posture Review)다. 이 문서에 미국은 북한을 이라크, 이란, 리비아, 시리아, 중국, 러시아와 함께 미국의 핵공격 가능대상국으로 명시하고, 2002년 9월 국가전략 보고서에서는 “적국이 미국과 우방을 겨냥하여 WMD로 공격해올 경우, 핵무기를 포함한 압도적인 무력을 동원해 보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이라크와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들의 우리에게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기 전에 억제하고 방어해야 한다”라고 적시하여 대북 핵 선제공격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은 2002년 12월 WMD 국가전략(National Strategy to Combat Weapons of Mass Destruction)을 통해 기존의 핵전략에서 대확산을 근간으로 공세적 핵전략을 채택하였다. 2004년 7월 8일 미 합동교리 3-40 “WMD 대응을 위한 합동교리(Joint Doctrine for Combat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는 강화된 대확산16) 정책을 군사적 지침으로 발전시킨 교리로서, 미국이 비확산, 대확산, 사후관리 능력과 함께 우방국에서의 작전 및 지원절차를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김학준은 이 교리에 대해 “미국이 한반도에서 북한의 WMD 위협에 대해 적용하게 될 군사전략과 협조지침이라 볼 수 있다.”17)고 평가한다. WMD 대응 교리를 미국의 교리로만 볼 수 없다는 점은 한미당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을 사전에 무력화하는 방안을 포함한 연합작전계획 수정작업을 공식적으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군사력 건설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대확산의 핵심인 공세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WMD를 조기에 식별 탐지할 수 있는 탐지위성, 전천후 영상탐지를 위해 SAR 레이다를 장착한 고고도 정찰기와 같은 첨단정보 정찰, 감시능력과 지하 침투탄과 같은 장거리 WMD 저장 및 생산시설, 운반수단에 대한 정밀타격 전력이 요구된다.

국방부가 군사력 건설 목표 및 방향과 관련하여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한 “감시/정찰-정밀타격-요격/방호전력 조기에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18)면서 “07년 북핵 위협 대비 전력 소요예산을 392억 원을 확보했다”19)고 밝히고 있는 점도 미국의 WMD 교리에 따른 대북 선제공격전략을 채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합참 역시 2006년 12월 21일 합참의장 지휘지침서에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저고도로 날아오는 스킵 노동미사일을 포착/요격하는 “한국식 탄도/유도탄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명문화”20) 했다고 밝혔다. MD는 반확산전략에서 적극 방어에 해당된다. RSOI/FE 연습을 비롯한 주요 한미연합연습에 WMD 반확산이 공식적으로 포함되었다. 연합사에서 발간한 '07~'10년 연합연습 시행지침서에 대량살상무기 반확산에 관한 훈련이 연합임무필수과제목록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다. 국방부 역시 을지포커스렌즈 연습, RSOI 연습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차단작전(PSI) 등을 포함해서 진행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합참도 2006년 10월 11일, 국회에 제출한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서 “지휘소 연습 때에는 북한의 핵관련 시설과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무기체계 및 지원시설을 감시/무력화하는 적극적 방어개념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21)고 밝힌 바 있다. 여기서 적극방어는 내용상으로 볼 때 미사일 방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확산의 핵심인 공세작전을 의미한다. F-117 스텔스 전폭기의 군산배치와 더불어 F-22 최신예 전투기를 최초로 해외에 배치한 것은 반확산 전략의 2번째 단계인 작전준비(억제를 위한 능력 시현)에 해당한다.

3. 북한 군사훈련과 비교해 보면 연합연습이 얼마나 공격적이고 과도한가를 엿볼 수 있음.

4. 한미연합 전쟁연습의 대미 종속성과 굴욕성

1) 미 증원전력의 전개는 미국이 일방적 ‘위기관리 조치’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

Rapid Thunder연습은 연합사 위기조치반과 연합전투 참모단을 대상으로 한 위기조치 절차 및 전시전환 지휘소 연습으로서 위기상황 발생 시 단시간 내에 다양한 정보를 통합하여 신속하게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훈련이다. 이 연습은 1년에 세차례 RSOI 연습 직전, 을지포커스렌즈 연습 직전, 그리고 가을에 열린다. 이 연습은 다양한 위기 상황에 따른 위기조치반의 행동절차를 숙지하고, 위기조치 반장인 연합사 작전참모 부장은 위기 징후의 정도에 따라 미 증원전력의 전개를 요청하는 연합사령관 판단서를 작성한다. 그런데 한반도에 참여한 군사적 긴장과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를 불러오는 미 증원전력의 전개는 미국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위기상황에 대비한 연합위기관리체제는 형식적으로는 초기단계부터 한국과 미국이 긴밀하게 협조하여 공동 대응하도록 되어 있지만 위기징후 목록의 작성, 위기대응반, 위기조치반의 반장을 미군장성인 연합사 작전참모부장이 맡고 있으며, 미 증원전력의 전개는 사령관 판단서뿐만 아니라 합참뿐만 아니라 국가통수기구의 결정과 지휘에 의거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의사가 관철될 여지란 거의 없다. 1994년 북한 핵 위기 시 미국이 취한 전투력 증강조치가 바로 이러한 사례이다. 미국은 1994년 봄 북한 핵문제에 대응한다는 구실 아래 전쟁 발발에 대비한 ‘전투력 증강’ 조치의 일환으로 정보 분석 요원, 작전계획 수립 요원, 패트리엇 및 에이타킴스 지대지 미사일 운용요원 등이 포함된 3~4백 명의 미군요원을 오산기지를 통해 비밀리에 입국시켰다. ‘전투력 증강’은 신속억제방안(FDO)을 통해 전쟁억제에 실패할 경우에 대비하여 초전에 긴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요 전투부대 및 전투지원부대를 증원하는 조치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당시 미국은 이 같은 조치(전투력 증강 초기 조치)를 우리 측에 통보하지 않고 진행했으며 연합사에서도 한국군을 배제한 채 미군들끼리 북핵 대책회의를 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²²⁾고 한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미 증원전력의 한반도 전개가 일방적으로 진행될 우려가 더욱 높아졌다. 연합위기관리 및 정보관리를 미국의 시각과 관점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조건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허용함으로써 미국은 우리 정부의 개입과 통제 밖에서 더욱 자유로이 미군 병력과 장비, 무기체계를 한반도 내외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2) 미국은 한미연합연습을 한국군에 대한 정보장악의 통로로 이용

2002년 RSOI/FE 연습 후 미국은 RSOI 기능과 체계 발전 등 10대 과제를 도출하여 후속조치를 위한 협의와 보완을 요구했다. 그 중 하나가 정보유통체계의 변화, 곧 서울지휘소(CPS)와 GCCS-K23)의 긴밀한 연동문제이다. 한국은 기술적 문제와 양쪽 시스템이 다르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명했으나 미국은 정보 공유를 명분으로 미국의 전세계적 지휘통제체계에 연결된 GCCS-K에 한국의 모든 자료를 넣어달라고 요구했다.²⁴⁾ 미국에 의한 한국군의 정보종속 우려는 작전통제권 반환 협상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다. 미국은 한국군의 독자적인 지휘자동화 체계인 합동지휘통제시스템(KJCCS : Korea Joint Command and Control System) 대신 미국의 GCCS를 계속 사용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현재 한국군은 GCCS를 사용하는 대가로 연간 25억 원 가량을 주한미군 분담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GCCS를 운용

하는데 드는 네트워크 유지비의 20~30%25) 문제는 비용만의 문제가 아니다. GCCS를 이용할 경우 미국이 허용하는 정보에만 접근할 수 있는 반면 GCCS의 운용권을 갖고 있는 미군은 이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군에 대한 정보를 모두 열람할 수 있다.

3) 미국은 전시지원협정을 통해 한국의 군사적 능력을 총체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한미양국정부는 작전계획 5027의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1991년 11월 21일 한미 정부간 전시지원에 관한 일괄 협정(WHNS)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은 한반도 유사시 전개되는 미 증원전력에 대한 한국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전시지원협정 제1조(정의)에는 ‘위기 또는 적대행위, 전시에 미군의 접수, 이동과 지속을 위하여’ 각종의 군사 및 민간자원과 지원을 제공하게 되어 있으며 평시에는 한미 전시지원운영위원회를 두어 전시지원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토의 발전시키며 전시지원시험과 연습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협정은 또한 국가동원령이 선포될 경우 민간자원까지 동원 할 수 있도록 규정26)하고 있다.

미국은 RSOI 연습과정에서 한국의 전시지원계획을 검증, 보완하고 미 증원전력의 수용, 대기, 이동과 전개 등 단계별로 체계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RSOI가 한미연합연습으로 실시된 1995년 2월 초 최초 잠정전시계획을 발간한 후 2년 주기로 잠정전시지원계획을 검토/발전시키고 있다. 전시지원협정에 의한 지원분야는 통신, 공병, 야전근무, 정비, 의료, 탄약, 생/화학 및 특수무기 근무 인원 및 노무, 유류, 경계, 보급, 수송 등 실로 광범위하다. 나아가 미국은 12개 기능 전 분야에 대한 한국의 책임과 확대된 지원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2002년 제34차 SCM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RSOI/FE 연습에서 전시지원협정상 의 계획소요의 실제동원훈련인 FTX 및 미 계획 소요 지원연습을 통해 미측이 요청한 소요를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2001년 잠정전시지원계획으로는 미측 소요의 61%만 지원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면서 낮은 지원율은 미 증원 병력의 규모를 재평가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한국에게 전개될 미군 병력의 규모는 줄이는 반면 전투 병력을 신속히 전개할 수 있게 해줄 대담한 전시지원 방안을 수립할 것을 국방부에 요구했다. 이처럼 전시지원협정은 미국이 한국에 평시에도 전시동원체제를 갖추도록 강요하는 것으로 한반도를 군비경쟁과 항상적인 전쟁위협으로 몰아넣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에게 무제한적인 부담을 강제한다. 또한 전시지원협정은 북한 김정일 정권 제거를 목적으로 한 작전계획 5027에 따른 미 증원군의 접수, 이동, 지속을 지원하기 위해 매 2년 마다 전시지원계획과 시차별 부대전개목록을 검토, 갱신하도록 되어 있는 등 우리 민족의 이익과 국가이익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4) 미국은 연합연습 비용 부담과 연합군수지원을 통해 2중 3중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한미연합연습과 관련된 한국부담은 전시지원협정에 따른 부담에 그치지 않는다. 한미연합사 주요 연합연습에 관한 한미양해각서(1998년 2월 11일 서명 및 발효)와 한미연합사 주요 연합연습에서의 모의지원에 관한 합의각서(1998년 2월 11일 서명 발효)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지불하는 RSOI와 을지포커스렌즈 연습 비용만해도 지난 5년간(2001년부터 2005년까지) 130억 원이 넘는다.

* 최근 5년간 연합연습 비용부담액

※ 자료출처 : 한미연합연습 역사와 연습비용 관련 임종인 의원 질의에 대한 합참(작전본부) 답변자료 2005, 8월 25일

다음으로 1988년 제20차 SCM에서 체결된 상호군수지원협정(MLSA)에 의한 군수지원도 있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은 미 국방부 산하 획득 및 상호지원프로그램에 속해있으며 주로 연합 연습, 교육훈련, 전개, 작전 및 다른 군 협력 업무 시 다른 나라 군대의 군수지원, 보급품, 용역을 이용하기 위해 미 국방부가 고안한 것이다. RSOI를 비롯한 한미연합 연습에서 한미 간에 상호군수지원이 이 협정에 의거해 이루어진다. 또한 2004년 미국의 강압에 의한 협정 개정으로 적용범위가 전 세계로 확대됨(27)으로써 미국은 세계적 차원에서 전개되는 군사작전과 다국적 훈련 간에도 한국정부와 한국군의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받게 되었다. 미국은 2002년 SCM에서 한미상호군수지원협정을 획득 및 상호지원협정(ACSA)으로 재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ACSA 협정은 다른 국제적 상호협정과 통일된 표준화된 양식으로서 미국은 이미 나토와 일본 등과 이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만일 MLSA가 ACSA로 재개정될 경우 미국을 매개로 한 나토, 일본, 호주 등과의 군사협력도 한층 고도화 될 것이다.

5. 연합연습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및 한미동맹의 가치, 포괄, 광역 동맹으로의 전환

1) 미 증원전력의 신속전개능력의 획기적 강화

기동성과 정밀타격력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미 증원전력의 신속 투사능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작전개념과 무기체계, 군구조 변환과 함께 기동성과 화력이 한층 강화된 한미연합전력의 대북 선제공격능력은 그만큼 강화된다. 또 이를 뒷받침하는 군수 병참시스템도 현대화되고 있다. 미국은 여단 전투 팀을 96시간 안에 세계 어디 곳이든지 파견이 가능하며, 1개 사단 파견에는 120시간, 5개 사단에는 30일이 걸리도록 만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라포트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반도 유사시에 전개되는 미 증원전력의 신속투사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현대화된 사전배치 장비, 전략적 수송수단, 최신 병참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 미사와 공군기지의 미5공군과 요코스카해군기지의 7함대, 괌의 13공군과 제3해상사전배치선단, 오키나와의 제3해병원정대 병력이 신속히 투입돼 2사단과 합류하도록 되어있다. 이들 병력은 미 육군의 초고속전장지원함(Theater support Vessel)과 공군의 C-17 GlobemasterⅢ(28), 해병대의 고속 수송선(HSV : High Speed Vessel)에 의해 신속히 한반도로 전개되고 캠프 캐롤에 배치된 미육군사전배치물자(APS)와 해군/해병대의 사전배치선단에 의해 전개되는 장비 및 물자와 결합해 대기하고 있다가 전술집결지로 이동, 연합사령관의 하달하는 작전 임무를 즉각 수행할 수 있도록 전장으로 통합된다.

2) 신속한 전개와 정밀타격능력의 강화를 위주로 RSOI 연습이 실시되고 있다.

2003년 이후 RSOI 연습에는 미국의 세계적 군사력 전개의 주축을 이루는 각종 공격용 무기인 핵항공모함, 핵잠수함, 이지스 구축함, F-117 스텔스 전폭기, 고속상륙정과 미국의 해외침략선봉부대인 스트라이커 부대, 오키나와의 미 해병대와 미 본토 병력 등이 동원되어 실시되고 있다. 2003년 3월 RSOI/FE 연습에 F-117 스텔스 전폭기가 1993년 탑스피리트(TS)이후 처음으로 참가하고 칼빈슨 핵 항공모가 부산항에 입항하였다. RSOI 연습 직전인 3월 2일에는 미군 RC-135 정찰기에 대해 4대의 북한 전투기가 근접비행한데 대해 미 국방부는 B-52 폭격기 12대와 B-1폭격기 12대를 즉각 서태평양 괌으로 파견했다. 2004년에는 군사분계선 바로 아래인 평택 항에서 미 해병대의 프리덤 배너 훈련을 RSOI 연습과 연계해 실시함으로써 해병대 병력과 장비 및 물자의 신속한 전개능력을 선보였으며, 2005년 RSOI

연습에는 기동성과 신속정밀타격력을 위주로 재편된 스트라이커 부대의 시험훈련이 전개되었다.

●미 지상군

미 육군의 초고속전장지원함(TSV-1X29)가 2005년 3월 17일 RSOI 연습 중 괌과 오키나와의 미 해병대 병력을 태우고 광양에서 미군 병력과 장비를 하역한 뒤 해군 1함대사령부가 있는 동해항에 입항하였다. 미 육군은 신속증원 전개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미육군사전배치물자(APS)제도에 의해 전시에 사용할 장비와 물자를 캠프 캐롤, 캠프 험프리를 비롯한 몇몇 전진 기지에 배치해두고 있다. 미 육군사전배치 물자는 현재 미 본토에 배치된 APS-1, 유럽의 APS-2, 해상에 배치되는 APS-3, 한국을 포함한 태평양지역의 APS-4, 중동의 APS-5 등으로 구분된다. APS-2는 3개 여단, APS-3은 1개 여단, APS-5는 2개 여단 규모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APS-4는 캠프 캐롤에 있으며, 1개 중여단 규모가 사용할 장비가 비축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벨 사령관은 작년 12월, 2007년 RSOI/FE 연습에는 해상사전배치선단을 이용해 사상 처음으로 중무장한 미중원군 1개 여단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등 최대 규모의 미군 전력을 참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³⁰⁾

●미 해군/해병대

미 해군은 태평양 지역에 1개의 항모전단³¹⁾과 상륙전단³²⁾을, 미 해병대는 태평양 지역에 1개의 해병원정군³³⁾과 1개 대대급 상륙부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2003년 5월 23일에는 오키나와의 제3해병원정대 제8연대 소속의 1개 대대 600명이 고속수송선(HSV) 1척에 탑승하여 24시간 만에 포항에 전개하는 훈련을 실시하였다. 미 해병대 사전배치선단은 미국의 신 군사전략에 따른 해병대 변환의 하나다. 미국은 지중해, 인도양(디에고 가르시아), 태평양(괌) 3곳에 사전배치선단을 운용하고 있다. 평소 17,600명의 해병 원정대 병력이 30일 동안의 작전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무기와 물자를 적재하고 있다가 유사시 전장에 즉각 투입된다. 미 해병대 사전배치선단은 매년 진해와 부산을 방문한다. 2004년 3월 8일 평택 항에서 미 해군/해병대의 사전배치부대(MPF) 훈련인 프리덤배너 훈련이 RSOI 연습과 연계해서 실시되었다. 미 해군/해병대의 해상사전배치부대(MPF) 장비들이 해상사전배치선단(MPS)의 선박으로부터 하역되며 미 해병부대들이 독수리 연습에 참가하였다. 이 훈련은 항공을 통한 미 해병대의 전개와 M1A1 탱크, 상륙돌격장갑차 등 장비와 병력의 배치시간을 단축시켜 기동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포항과 진해 등 한반도 남단에서 실시되던 프리덤배너 훈련³⁴⁾이 군사분계선 바로 밑인 평택에서 기동력을 최대한 높여 실시되었다는 것은 평택을 대 북한 군사작전의 거점으로 삼고 북한을 신속하게 제압하려는 군사적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포항 무적에 제3해병원정대 과견대가 주둔하고 있으며 한반도 유사시에는 오키나와에 있는 미 해병 제3원정군(III MEF)과 한국 해병 0개 사단과 상륙지원단이 결합하여 0개 보병사단, 0개 비행사단, 증강된 군수지원단으로 구성된 한미연합해병원정단이 구성된다. 연합사 작전계획 기획과 연합연습의 중점사항의 하나가 바로 Expeditionary Logistics (상륙기동작전에 대한 군수지원)이다.³⁵⁾ 2007년 1월 11일 이상로 해병대사령관과 존 굿맨 미 태평양사병부대(MFP)사령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연합해병지휘관 회의를 열고 '07 RSOI 등 한미 간 주요 연합연습 및 연습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협의했으나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미 공군

2007년 F-117 스텔스 전폭기가 군산에 배치된 상태에서 최신예 미 스텔스 전투기인 F-22 12대가 오키나와 가테나 공군기지에 배치되었다. 이와 관련 부르스 벡톨 미 해병대 참모대학 교수는 “동북아로 최정예 전투기를 이동시키는 것은 훈련 이상의 목적이 있다”면서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신속억제방안(FDO)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FDO의 핵심은 신속정밀타격능력이며 F-22 랩터는 자위대와 주일미군 뿐만 아니라 한국공군과도 훈련을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수송 및 군수지원

전략수송 중 병력은 수송기 등 항공수단으로 주로 오산기지를 활용하게 되지만 캠프 험프리의 활주로 또한 미 수송 작전의 주력인 C-17 수송기와 같은 대형 수송기가 착륙할 수 있도록 활주로 기반이 개선되었다. 주한미군은 장관급 전략대화에서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한 후인 2006년 2월 14일 미 증원부대의 접수와 배치, 전방이동, 통합 미 증원전력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501증원지원여단을 미 육군 사상 처음으로 창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³⁶⁾ 한국 전구내 미군에 대한 군수지원을 총괄할 미 합동지원사(JFSC)설치를 추진 중이며 한국도 이와 유사하거나 대등한 권한을 갖는 기구를 편성 중에 있다.³⁷⁾ 2006년 RSOI 기간 중에 미군은 미 합동지원사 창설을 연습한 바 있다.

3) 다국적 훈련과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

유엔사/연합사 한미연합연습에 대해서도 의무지원, 탐색 및 구조, 해상차단작전, 대테러, 비전투원 호송연습을 중심으로 연합 및 다국적 상호운용성 모듈을 포함시켜 유엔사 회원국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유엔사는 북한 정권 붕괴 등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해 특수부대 운영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 유엔사-특수전 컨퍼런스는 2006년까지 모두 5번의 회의가 열렸고 2006년에 열린 유엔사-특수전 컨퍼런스는 13개국의 현역장교와 민간인 200명이 참가하여 전쟁억지, 북한 정권붕괴와 남북무력충돌 등 세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되었다.

●MPAT 훈련³⁸⁾

MPAT 훈련은 미 태평양사령부가 주도하는 긴급재해 재난과 영토, 민족, 종교분쟁에 대한 다국적 협력 방안의 하나이다. MPAT 훈련의 목적은 위기사태 발생 초기에 군부대 투입과 지원 작전 전개를 위한 절차와 능력 배양, 효율적 군사작전 지원을 위해 다국적간 지휘관계, 지휘/통제 및 통신절차, 공통예규를 사전에 연습함으로써 유사시 다국적간 상호운용성 향상과 신속한 대응능력을 보장하는데 있다. 세미나 형식의 개념 발전회의와 위기조치 계획을 수립하는 지휘소 연습을 병행한다. 2001년 4차 워크숍부터 한국군도 참가하고 있으며 2002년 1월에는 한국에서 MPAT 제3차 연습이 실시되었는데, 이는 2001년 8월 미 태평양사령관이 방한하여 한미공동개최를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3차 연습의 각본은 “한국 인근에 위치한 과랑도 공화국에서 재난 재해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여 한국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군을 구성하여 긴급 지원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과랑도 공화국은 북한을 의미하고 있다. 개념계획 5029-99가 작성된 직후인 2000년부터 미국이 북한에 긴급재난 재해로 대량난민이 발생한다는 가정 하에 위기 발생 초기에 군부대 투입과 지원 작전 전개를 위한 다국적연습을 24개국과 벌인 것은 이 훈련이 북한 긴급사태에 대비한 다국적 훈련이라는 것을 반증해준다.

● 팀 챌린지 훈련

미국은 평화유지, 평화강제, 재난 구호 등의 활동을 주된 훈련목표로 삼는 다국적 훈련인 팀 챌린지 훈련을 주도하고 있으며 한국이 여기에 읍서버로 참가한 바 있다. 재난구호에 한국군 파견은 주한미군의 아태기동군화와 연계되고 전쟁이외의 경우에도 대북군사개입의 명분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 환태평양연습(RIMPAC)

림팩 연습은 미국 태평양사령부의 지휘 하에 격년제로 열리는 해상종합 기동연습으로써 하와이 근해에서 열리며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칠레, 페루, 일본, 한국 등 8개국이 참여한다. 림팩 연습은 테러, 해상교통로 보호라는 구실 아래 냉전시기에는 소련을, 냉전 후에는 유사시 중국을 즉각 봉쇄할 목적으로 미국의 군사전략에 따라 태평양에서 전개하는 미 해군 작전의 하나이다. 2006년에는 림팩연습과 연계된 'Valiant Shield(용감한 방패) 2006' 기동훈련을 실시했는데 이 훈련은 "북한과 역내 여타 국가들에게 미국의 능력을 과시"할 목적 하에 진행됐다. 여기서 '역내 국가'란 다름 아닌 중국을 의미한다. 특히 '06 림팩 연습은 미국이 대테러, 해상교통로 보호를 구실로 영국, 일본, 한국, 호주 등 동맹국들을 끌어들이고 대잠수함전, 수상전, 대공전, 해상자유공방전, 미사일 발사 훈련 등 해상종합훈련의 실시를 통해 연합작전 능력의 배가와 전략무기, 최첨단 정밀타격무기들의 상호 운용성을 증가시킴으로써 미국의 대중국 봉쇄를 위한 군사적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목적 하에 진행되었다.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미국의 태평양 작전에 우리가 개입할 경우 한국과 중국은 적대적 관계로 되고, 그 결과 한국은 중국의 공격 대상으로 되어 국가안보에 결정적 타격을 입게 되는 물론 동북아에 전쟁위기가 고조될 것이 분명하다.

림팩 연습은 중국뿐만 아니라 유사시 북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공격을 노리고 있다.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높아지자 미국은 '용감한 방패 2006' 기동훈련에 참가한 유도 미사일 장착 순양함 2척을 북한 해역에 급파했다. 6~8월 태평양 상의 훈련을 통해 미국이 노리는 바가 북에 대한 선제공격 위협에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러한 림팩 연습에 우리 해군이 구축함, 잠수함, 대잠헬기, 초계기 등을 이끌고 참가하는 것은 한미동맹을 침략적으로 재편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기정사실화 시켜 줄 뿐 아니라 남북간에는 군사적 대결과 불신을 초래할 뿐이다. 북한이 '06 림팩에 대해 미국 주도의 '다국적 북침전쟁연습' 이라고 맹비난을 가하면서 우리 정부에 대해 '침략전쟁에 공모자'라고 비난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해군 당국은 림팩 연습 참가 근거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미동맹의 목적을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방어'로, 그 적용범위를 대한민국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군의 림팩 연습 참가는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마저 위배하는 불법적인 것이다. 한편 한국의 림팩 연습 참가에 대해 "태평양 상의 공동방위체제를 구축하려는 미국이 우리에게 책임을 분담시키는 것"이라는 차영구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90년 당시 발언은 한국 군사당국이 어떻게 불법적인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을 국민 몰래 추구해왔는지 입증해 준다.

6. 나가며-대북 공격적 작전계획과 연합연습을 폐기하고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안보 전략으로 전환해야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2/13합의)가 합의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향후 정세는 한미 동맹을 매개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과정에 최대한 개입함으로써 자국의 이익과 군사패권을 관철하려는 미국과 이에 대항하여 자주, 평화, 통일이라는 본질적 요구를 관철하려는 우리 민족사이의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이다.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 5026, 5027, 5029는 모두 김정일 정권 제거를 목적으로 하거나 정권 붕괴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RSOI/FE를 비롯한 한미연합 전쟁연습은 이에 따른 대북 (선제) 공격연습이다. 이런 작전계획과 전쟁연습이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의 평화주의 원칙과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한 방어를 임무로 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이다. 또 남북 사이의 주요한 정치적 합의사항인 평화적 통일원칙에도 어긋난다. 아울러 한미연합전쟁연습은 우리의 민족이익 및 국가이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오로지 미국의 국익과 그에 기초한 미국의 대북군사패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2/13 합의에 따라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에 대한 전망이 그 어느 때보다 밝게 열리고 있는 지금 미국의 국가이익과 안보전략에 의거한 대북 공격적 작전계획과 연습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이에 시민사회진영은 향후 정세를 주동적으로 개척해나가기 위해서 한미동맹의 해소의 필요성과 절박성, 자주, 평화, 통일이라는 민족이익에 기초한 국가안보전략과 이에 근거한 국방전략, 군사전략, 작전계획, 전쟁연습, 무기체계, 군 구조 건설의 필요성을 국민 대중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작전통제권 환수를 계기로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수립하는 새로운 작전계획은 전수방어전략에 기초해 방어와 격퇴의 수준을 넘어서는 안 되며 그에 따라 우리 군의 연습과 훈련은 방어연습에 국한하여 실시하도록 시민사회진영의 대응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

1) 이 글은 2007년 3월 14일 민변과 평통사 등이 공동 주최로 열린 RSOI/FE 연습 심층토론회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한 것입니다.

2) COMBINED FORCES COMMAND, 연합사연합훈련시행지침서, 연습계획 수립지침, COMBINED TRAINING PLAN FY'07~'10, www.cj3exercise.korea.army.mil/default.aspx

3) 1961년에 시작된 독수리 연습은 1995년부터 팀스피리트 연습을 대체하는 방안으로 사단급 야외기동훈련(FTX)을, 1997년부터는 군단급 FTX를 추가하여 실시하고 있다.

4) 신속억제방안(FDO : Flexible Deterrence Option)은 작계5027 부록에 목적이 제시되어 있으며 한반도 위기 발생 시 시행되는 정치, 경제, 외교, 군사적 방안으로서 약 130여 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6 국방백서, 50쪽) 신속억제방안의 군사적 방안에는 1개 항모 전투단, 스텔스 전폭기를 포함하여 200~300대 규모의 항공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4~72시간 내에 한반도에 전개되도록 계획되어 있다. 전투력 증강(FMP : Force Module

Package)은 신속억제방안에 의한 위기 억제가 실패하거나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고조될 경우 기존에 배치되어 있거나 배치되지 않은 전투력 중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개된다. 전투력증강의 주요전력으로는 신속억제방안에 추가하여 2개의 항모전투단, 1천여 대의 항공기, 상당수의 해병대 병력 및 최소한 30일간 전투지속력을 갖도록 보급 물자를 포함하여 구성된다.(김성균, TPFDD는 어떻게 시행되는가? 합참20호) 군사적 FDO와 달리 전투력 증강은 비공개 하에 전개된다. 시차별부대전개제원(TPFDD : Time Phased Forces Deployment Date)은 신속억제방안, 전투력 증강 등을 대부분 포함하여 육, 해, 공, 해병대병력69만 명, 함정 160척, 항공기 2,000여대 규모이다.(국방부, 2006국방백서, 50쪽)

5) 권영길 의원실 보도자료 2006.10.12, 2002년 12월 이준 전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방장관이 합의한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을 위한 대한민국 국방장관과 미합중국 국방장관의 군사위원회에 대한 전략기획지침’

6) 권영길 의원실 보도자료, 2005.10.12

7) 국방부, 2006국방백서 3장 1절, 2 전면전 대비태세 확립, 53쪽

8) 국방부, 2006국방백서 제4장 제1절, 군사력 건설 경과 및 평가

9) 미국은 1991년 이라크와의 전쟁을 평가하면서 이 전쟁에서 미국은 승리하였으나 후세인 정권이 여전히 견재하고 반미활동을 강화해 가자 걸프전에서 후세인정권을 제거하지 않은 것을 큰 실수로 평가함. 이에 따라 미국은 이라크 작전계획인 ‘작전계획 1003’의 작전목표를 쿠웨이트로부터 이라크군을 축출하는 것에서 ‘이라크로 진격 후세인 정권을 제거한다.’로 수정함.

10) 국방부, 2000년 국방백서, 63쪽

11)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2004년 국정감사자료에서 작전계획5027-04에는 69만 명이라는 대규모의 증원전력의 현실성 문제와 신 군사전략에 따른 전쟁개념의 발전으로 시차별부대전개제원(TPFDD)이 빠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12) 김성균, TPFDD는 어떻게 시행되는가? 합참 20호

13) 정명진, “한미연합상륙연습 ‘작전계획5027-04 적용’”, 통일뉴스 2006.3.30

14) 당시 훈련현장에서 취재하고 있던 <통일뉴스> 정명진 기자에 따르면, 국방부 관계자는 ‘이러한 시나리오가 ‘5027-04의 3단계 2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15) 합동 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 합참 2004

16) 대확산은 탐지 및 감시, 작전준비, 공세 작전, 적극 방어, 소극방어의 5단계로 구성된다. 대확산의 핵심은 적의 WMD를 조기에 식별하여 이를 무력화시키거나 파괴시킬 군사적 능력을 갖추는 공세작전에 있으며 MD체제 구축이 적극 방어의 일부로 대확산의 큰 틀에 포함되었다. 김학준, 합참 작전본부 중심작전과 「미합참의 WMD 대응교리 제정과 우리 군의 WMD대비태세 발전방향」, 합참 제24호 2005.1

17) 김학준, 합참 작전본부 중심작전과 “미합참의 WMD 대응교리 제정과 우리 군의 WMD 대비태세 발전방향, 합참 제24호 2005.1

18) 국방부, 2006국방백서 76쪽

19) 국방부, 연두업무보고요약보고서, 2007국방정책

20) 매일경제신문 2006.12.21

21) 한겨레 2006.

- 22) 조선일보, 주한미군50년 3: 도상작전/위게임, 1995.9.24
- 23) GCCS-K는 2006년 2월 후속체계인 CENTRIXS-K로 바뀌었다.
- 24) 2002.9.26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 육군 제2군사령부
- 25) 동아일보 인터넷 판 2006.11.24
- 26) 전시지원협정 제2조 일반책임.
- 27) 이 협정은 적용범위가 한반도와 북미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2004년 2월 미국이 강압에 의한 협정개정으로 적용범위가 세계로 확대되었다. 미국은 이라크에 파병된 서희/제마부대에 대한 물 공급과 물자 수송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하여 한국의 굴복을 받아냈다.
- 28) 기존 수송기(C-130, C-141, C-5)의 항속거리와 적재 용량의 한계를 극복하고 능력을 향상시킨 다목적 수송기이다. 완전무장한 공정부대원 102명을 수송하고, 8,000마일 이상 중간 기착 없이 작전수행이 가능하다.
- 29) 전장 98m에 배수량1,800t의 수송선으로 병력300, 화물 700t을 탑재하고 최대속력 42노트(약 76km/h)로 항해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 30) 동아일보 2006.12.13
- 31) 1개의 항모전투단은 항모1척과 1개의 전투비행단(전투기72대 규모), 공격용 함재기 50대, E-2C 조기경보기 4대, E-A4B정찰기 4대 S-3B 대잠전투기 8기, ES-3B 정보수집항공기 2대, H-60 헬기 6대, 그리고 각종 전투대함(장거리 공격용 토마호크 무장 2척의 유도미사일 순양함, 대공전을 위한 1척의 유도 미사일 구축함, 대잠전에 투입되는 1척의 구축함과 프리깃함), 대함대잠공격용 잠수함 2척, 그리고 탄약보급함, 유조선 등이다.
- 32) 상륙준비단은 대규모 데크를 가진 상륙강습함선 1척, 2~4척의 상륙정, 1개의 해병원정부대로 구성된다.
- 33) 한 개의 해병원정군은 해병 1개 사단과 1개의 전투 비행단 규모가 포함된다.
- 34) 한미연합사 주요연습과 연계해서 실시되는 미 해병/해군의 사전배치부대(MPF)연습으로서 한반도에 적용 시 보통 RSOI/FE연습과 같은 시기에 실시된다.
- 35) 한미연합사, '07~'10년 연합훈련시행지침서
- 36) 성조지 2006.2.14,
- 37) 한미연합사, '07~'10년 연합훈련시행지침서
- 38) MPAT은 Multinational Planning Augmentation Team(다국적계획지원팀)의 머리글자로 '아태지역에서 재해, 재난, 등 우발사태 발생 시 신속한 군사적 지원 작전을 위해 준비된 다국적계획수립전문팀이다.

| 인물 |

‘노동시장의 유연화’, ‘주한미군의 유연성’ 둘 다 막아내야

글 : 회원사업팀 정동석

지난 해 대전 충남 평통사 운영위원회에 교육차 내려가 처음으로 김지수 운영위원과 인사를 나눈 후 대전역 광장에서 노동 현안을 가지고 농성 중이던 그를 만난 것이 두 번째 만남. 이번에 <평화누리통일누리> ‘인물’ 꼭지를 위해 만난 것이 세 번째 만남이다. 깔끔한 이미지와 넉넉한 인상, 그 누가 보더라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대학노조 충남대 지부 지부장을 맡고 있는 김지수 대전충남 평통사 운영위원을 그의 인상처럼 깔끔히 정리된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만났다.

●노동조합의 연역을 보니까 노조 결성(1997년) 이후부터 지금 6대 집행부에 이르기까지 지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신데요, 일단 대학노조 충남대 지부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원래 1987년에 노조가 있었습니다. 89년에 노조가 무너지고 97년 3월 18일 재건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위원장으로 추대되고 지금까지 위원장을 해오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니 노조가 없다가 만드는 것보다 복원하는 것이라 더 쉽지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합원 대상자가 136명이었는데 40명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조합원들을 찾아다니고 만나다 보니까 노동조합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벽이었습니다. 과거의 노조 임원진, 집행부가 자기의 이익만을 취하면서 노조가 파괴된 경험 때문이지요.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나서 조합원들이 쭉 지켜보다가 불신과 의구심들이 해소 됐는지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시작했고, 조합 활동들이 본격적으로 시작 되었죠.

시기적으로 좀 불행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 해 IMF가 터지면서 시기적으로 ‘고통분담’이다, ‘급여 반납’의 분위기였죠. 그래 처음엔 경제적 창출은 없었지만 조합원들을 구조조정의 위협에서 다 지켜냈죠. 신분보장을 확보해 냈습니다. 그러면서 조합원들의 신뢰가 많이 쌓였습니다. 노동조합에게는 위기이면서 기회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직원 및 조합원은 어느 정도 이고, 조합원 교육 같은 문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지요.

? 현재 조합원은 96명입니다. 학교내 정규직 직원은 360명 정도인데 이중 교육부 소속 공무원들이 있구요 비정규직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일용직, 프로젝트 요원, 파견직, 공익근무 요원 등이 있습니다. 구성이 그렇다 보니 조합원 역량상 파업을 하게 되면 파급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파업의 칼을 뽑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체근로가 가능하니까요. 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합원 교육은 민주노총이나 대학노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교내 강좌는 4회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 특성상 전 조합원들이 다 모이기는 쉽지 않아요...

●얼마 전에 ‘국립대 법인화’ 문제가 주요 현안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와 최근 학내 주요 현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크게 두 가지 현안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학내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이구요, 학외적인 문제로는 국립대 법인화 문제입니다.

학내에 비정규직이 너무 많은데, 조합원들이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비정규직 분들을 조합에 가입을 시키려 해도 스스로 소극적이고 많은 눈치들을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의 신분 전환을 선차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법인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입법 예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공청회 때 단상점거도 하고 해서 벌금도 꽤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식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인화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이라는 공공성이 훼손된다는 데에 있습니다. 교육이 상품화되고 공교육이 상실되고, 재정지원은 줄이고 통제는 강화되는 것이죠.

●얼마 전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가 끝났습니다. 민주노총 내 많은 분열의 모습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려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운동에 대한 노선이 확고한 것은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노선, 의견을 부정하고 심지어 대립하고 부딪치는 모습을 보면 속상하고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평통사 회원이 되시기 전에 통일운동에 대한 관심은 어떠하셨는지요, 회원이 되신 이후의 변화가 있다면?

? 평통사 회원이 되기 전에는 솔직히 통일운동에 큰 관심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대학노조 내에 통일위원회가 있기는 합니다. 예전에 군산대학교에서 파업이 있었는데, 파업 때 지원을 가니까 문정현 신부님께서 오셔서 많은 힘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 문정현 신부님 관련 기사 등을 보면서 조금씩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그리고 대학노조 군산대 지부장님이 대학노조 통일위원장이신데 제가 존경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심 있게 보게 되는 정도였습니다.

평통사 회원이 된 이후에 특히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 등을 알게 되면서 할 일이 많아졌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대전 충남 평통사 총회 때 활동영상을 보고 새삼 느낀 소감인데 내가 지난 해 평통사 활동을 제대로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변화된 것은 보는 눈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이예요. 그동안은 미군문제, 평화, 통일관련 모습과 기사를 대충 봤었는데, 교육을 받고 시각의 변화가 많이 생겼것 같아요. 귀가 열렸다고 할까요. 이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들어 보지 못했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단어가 이해가 되니까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눈이 좀 뜨이는 것 같아요.

‘노동시장의 유연화’ 얘기가 나오면서 ‘유연화, 유연성’이라는 단어에 예민해 있었습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노동자들의 삶을 파탄 내는 것처럼, ‘주한미군의 유연성’으로 우리 민족이 초토화 될 수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둘 다 막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전 충남 평통사 총회도 끝나고 했는데요, 평통사 활동에 대한 평가, 바람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일단 대전충남 평통사와 관련해서는 지역 현안이나 지역 사회에 녹아 들어가는 지역 평통사가 되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민주노총 대전지역 본부 내에 통일위원회가 있는데요, 현재 지역본부가 구성이 안 되기는 했지만 민주노총 대전지역 본부가 자리를 잡으면 서로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노조 내에서 ‘북한 어린이 두유먹이기’ 운동을 하기로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통사가 노동자들 속에 뿌리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내부에서 노동자에 대한 인식의 공통성도 높여야 하구요. 노동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고 의견을 모아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전 충남 평통사가 뭔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실천적으로 풀어 보려는 성실한 모습, 2월 말 방위비 분담금 국회 비준을 반대하는 선언운동에 대학 노조의 위원장들을 적극적으로 조직해 주는 등 그의 모습은 나에게 남다른 감명으로 남아있다. 그의 바람처럼, 노동자 속에서 든든히 뿌리내린 평통사, 평화와 통일 운동에 앞장서는 노동자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신성 무고 인들을 위한 축연과 미 전략 사령부

글·사진 : 최성희(뉴욕, 미술인)

봄에 철 지난 겨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이해하기 바란다. 또한 나는 어렸을 때 가톨릭 세례를 부모님 손에 이끌려 받았지만 고등학교까지만 다닌 성당에선 줄기에 바싹고 하얗고 조그만 세례 빵만 기다렸던 (맛은 없지만 어쨌든 먹는 거니까) 비 신자에 가까웠음을 고백한다. 그래서 이 글에 쓴 20여년 만에 만난 가톨릭 분위기가 낯설면서도 친숙한 것이었음을 이해하길 바란다.

2005년 겨울 한 이메일에 첨부된 충격적 사진을 기억하고 있다. 신부님 등 네 명이 서로 굳건히 팔짱을 끼고 미 전략사령부 정문을 가로지르는 모습이였다. 지금도 그렇지만 나는 미국 내 소수 가톨릭 노동자회 등 가톨릭 평화운동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했다. 2006년 겨울 우연히 같은 단체에서 이메일이 왔을 때 흥분되었다. 그리고 당장 짐을 싸다. “가자!”

2006년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미 네브래스카 주의 오마하와 미 전략사령부(Strategic Command)가 있는 오퍼트 공군기지(Offutt Air Force Base) 앞에서 -오마하 남쪽의 벨뢰브에 위치- 아이오와 주 ‘데스 모인스 가톨릭 노동자회’(Des Moines Catholic Worker, www.desmoinescatholicworker.org)의 프랭크 코다로와 오마하 가톨릭 노동자회의 제리 애브너가 주최한 연간 28번째 ‘신성 무고 인들을 위한 묵상과 증인 축연제’(Feast of Holy Innocents Retreat and Witness)와 현재 전쟁 범죄 주범인 미 전략사령부에 대한 항의 시위가 있었다.

가톨릭 노동자회 운동은 1933년 뉴욕 시의 피터 모린과 도로시 데이에 의해 설립, 성서의 자애, 연민, 정의, 사랑의 가르침을 실현하기 위해 비폭력, 자발적 가난, 자비를 삶의 길로 채택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는데 비 가톨릭교도도 이 공동체에서 많이 일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130여개의 공동체가 있다고 한다. 이들은 헐벗은 이웃에 대한 무료 숙소와 음식, 정신적 양식 제공 이외에도 비폭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자 굳건한 평화운동을 해 왔다.

행사는 사전 이틀 간 오마하 크레이대학 부속 성당 안 묵상 및 행사소개 모임과 28일의 기지 앞 시위였다. 이틀간은 11명이 모였는데 나를 빼곤 서로 다 알고 있었다. 28일의 시위에는 25명으로 불어났다. 행사의 의의는 프랭크 코다로가 28일 오퍼트 공군기지 앞 항의 시위에서 읽은 성명서에서 다음과 같이 밝혀진다. 부분들을 발췌한다.

“가톨릭 성구에 의거, 성당은 12월 28일, (예수님 탄생 시) 헤롯왕의 베들레헴의 모든 남아 살해를 기념, 신성한 무고 인들을 위한 축연 행사를 한다. 매튜의 유아 이야기 복음을 이용, 우리는 헤롯왕, 그의 베들레헴의 무고한 아기들 살해, 그리고 미국의 지원 아래에 있는 현

대의 헤롯들의 살인적 행위와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우리는 성서시대 이후 제국들의 힘 구조가 바뀌지 않았음을 보아 왔다. 예수님 시대의 헤롯은 로마 군단들에 의해 유지되었다. 현대 헤롯들은 미군의 전 지구적 현존과 오퍼트 기지의 핵과 우주명령국에 의해 유지된다.”

“오퍼트 공군기지는 미국의 핵무기 투하 본부이자 명령 본부로 56년간 그 역할을 하였다. 오늘날 오퍼트 기지의 전략사령부는 전 세계를 매년, 매일, 매시, 매분, 핵 섬멸의 위협으로 몰아놓고 있다.”

“우리는 오늘 미국의 반 생명, 반 평화, 반 사랑, 반 그리스도, 반 성탄적 삶때문에 수치감과 한탄에 차서 있다. 우리는 회개의 기도로, 어둠의 시대와 땅이었던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인류 역사에 준 성탄 혼에 대한 신념과 신뢰로 왔다. 우리는 이와 같은 성탄 혼이 전쟁을 생산해 내는 제국적 삶을 바꿔 평화로운 삶으로 인도하기를 바란다.”

프랭크 코다로는 2005년 같은 행사 때 다른 세 명과 함께 항의의 뜻으로 기지 정문 울타리를 넘어 기지 내부를 가로지르고 6개월 동안 감옥에 있었다. 1979년부터 매년 전략사령부 앞에서 시위를 해온 그의 12번째 구속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취재한 기지 앞 시위의 25명 참가자 중 나이 드신 신부님, 수녀님 등 다수가 기지 앞 시위 등으로 여러 번 구속된 경험이 있어 나를 아연(?)하게 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가톨릭 노동자 모임의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평화를 위한 네브래스카인들(nebraskansforpeace.org) 활동가 등 여러 단체와 개인이었다. 2006년에는 기지 내부를 가로지르기는 항의행동이 취소돼 구속된 이는 아무도 없었다.

프랭크 코다로의 성명서 이후에 사람들은 가장 낮은 계급인 양치기들에게 예수 탄생을 알릴 사명이 주어진 성탄 혼을 상기하듯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혼신으로 불렀고 짐 머피 신부님은 경비원들이 숨어 있는 기지를 향해 군사 직업을 관두고 평화운동에 참가하라고 열정적인 즉석 탄원연설을 했다.

참가자 중 아이오와에 사는 빌과 진 베이싱어 부부는 75년 인혁당 사건이 있었을 때 우연히 한국에 있었다. 그들은 뜻있는 가톨릭, 기독교 선교사들과 함께 미 대사관 앞 항의시위를 조직했었다고 한다. 8명의 그들은 8명의 사형수를 상징하는 검은 두건을 쓰고 사형수 복장 차림으로 미 대사관 앞에서 있었다. 이 일로 빌은 한국 중앙정보부로부터 철야심문을 받았고 추방의 위기를 맞기도 했었다. 그의 부인 진이 이때를 회고하며 쓴 70-80년대 한국 민주화 운동 증인 수기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발간한 “More Than Witnesses: How a Small Group of Missionaries Aided Korea’s Democratic Revolution.”에 실려 있다. 조만간 한국어로도 출간된다고 한다.

빌은 그때의 무고한 사형수들과 처절한 아내들, 당시 한국 정부의 반인륜적 탄압, 그리고 배후에 있었던 미국 정부에 대해 아직도 눈에 슬픔과 분노의 눈물이 고이는 일흔이 넘는 할아버지이다. 프랭크 코다로와 빌 모두 시노트 신부님(문정현 신부님과 함께 인혁당 사건을 세상에 알려냈던)의 활약을 따뜻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뜻밖에 나는 미국에서 한국 민주화 운동의 산 증인들을 만난 것이고 그들이 미국에서도 온

몸을 바쳐 평화운동에 종사하고 있음을 목격한 것이다.

| 평통史 |

2003년 재창립 후 벌써 5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같은 해 41호 평통사 회지는 <평화누리통일누리>라는 새 이름을 달았다. 이번 65호 <평화누리통일누리>부터는 94년 창립때부터 줄곧 공동대표였으며 재창립 후에는 상임대표로 헌신중인 문규현, 홍근수 두 분에게서 평화와 통일을여는사람들의 지난 이야기를 듣고자 한다. 그 와중에 40호까지의 평통사 회지에 실렸던 소중한 내용들도 다시 소개하는 기회를 얻고자 한다. 첫번째 이야기는 홍근수 상임대표로부터 들었다. - 편집자 주 -

평통史 94년, 창립에 이르기까지

“평통사가 생기기 전에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라는 것이 있었어요. 92년 즈음에 김낙중 선생, 손병선 선생, 김진균 선생, 기세춘 선생 등이 활동하던 ‘평화통일연구회’가 김낙중 선생과 손병선 선생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고 이러면서 활동이 힘들어지게 됐지요.

하루는 기세춘씨가 나를 찾아와서 활동을 같이 하자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나는 ‘같이하는데 맨 꼴찌로 이름을 넣어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마침 총회하던 날 볼에 뭐가 나서 너무 아프고, 열도 나고 해서 못 나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상임의장이 돼 있더라구요.”

당시 ‘연대회의’ 창립선언문에는 ‘연대회의’의 과제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추진하고 핵무기없는 세상의 건설을 위해 노력할 것, △평화정착을 위해 실제적이고 과감한 군비축소를 위해 싸울 것,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여 평화체제를 시급히 정착할 것. △정치군사적 자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운동을 할 것 등이 그것이다. 반핵평화운동연합과 평화통일연구회가 통합되고 각계각층 66여명의 인사가 발기인으로 참여한 ‘연대회의’는 1993년 6월 18일 창립하게 된다.

“그 다음에 ‘새로운 평화운동 대중단체’를 준비하던 분들과 1년 가까운 논의 끝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로 통합하게 됐죠. 그런데, 준비기간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내가 회장으로 있던 임수경 후원회 쪽 분들은 많이 참여 못하게 됐죠. 사실 문규현 상임대표를 개인적으로 처음 만난 날도 임수경이 석방돼서 환영식이 열렸는데 바로 그 전날 임수경네 집에서였어요. 다음날 임수경 환영식에서 문규현 신부가 감동적 연설을 했었던게 기억나요.”

변연식 공동대표의 기억에 의하면 문규현 홍근수 상임대표 두 분은 대전에 있는 목욕탕에서 서로 회합을 가지고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창립을 의논했다고 한다. 1994년 6월 4일 종로성당에서 드디어 평통사는 창립총회를 하게 된다. 당시 통일운동의 분열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결같은 의지와 역량을 더 크게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대의에 입각하여”(평통사 창립총회 경과보고문) 창립한 평통사는 창립때부터 ‘단결’의 정신을 구현했던 것이다. 이러한 정신이 2003년 각 지역에서 산개해 투쟁하던 단체들이 ‘통합과 진진’이라는 기치아래 더 큰 평통사를 만들어 낸 정신이 아니었을까?

‘평통사 창립총회 경과보고문’에는 이어 “이 땅에서 평화와 통일은 박수치는 두 손바닥이다. 마주잡는 두 손이다. 그렇다. 평화는 통일을 여는 길이고, 통일은 평화를 여는 길이다.(중략) 이제 우리는 크나큰 대중의 여망과 역량을 끌어안고 오직 한 길, 평화와 통일을 여는 그 기로 힘차게 나아갈 것이다.”라고 쓰여 있다. 당시 창립총회문을 ‘우렁찬 목소리로 낭독했던’ 이가 ‘연대회의’ 시절부터 지금까지 활발한 활동을 하는 권병길 회원(배우)이다. (평통사 회지 1호)

이렇게 출범한 평통사는 기본적 사업영역으로 △핵문제 해결, △평화체제 구축, △군축과 민생복지로의 전화, △국제연대, △민주적 병역제도 실현, △군사문화 청산과 평화문화 확산, △남북 교류와 협력 등의 사업 계획을 제출하였다.

“그래서 94년부터 방위비(국방비) 삭감 운동을 활발히 했죠, 토론회도 하고, 엽서보내기도 하고, 무기도입 저지운동도 하고 그랬죠. 또 미국에 지원하는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문제제기도 했어요. 그때 조임숙씨가 있었는데, 그 분이 아주 열심히 했어요. 또 돌아가신 김진균 교수가 평화군축분야에서는 아주 권위자였는데, 거의 일주일에 한번씩 (분회모임)식의 토론회 모임을 주도했었죠.”

실제 회지 1호에는 조임숙 씨의 쓴 ‘NPT 조약, 무엇이 문제인가?’과 이선태 씨의 ‘북한 핵문제와 통일문제의 전망’ 같은 글이 실려 있고, 회지 3호에는 강정구 교수의 ‘새로운 동북아 질서와 통일 및 군축’ 조임숙 씨의 ‘방위비(국방비) 삭감, 왜 해야 하나?’는 내용이 실려 있다. 또 94년에는 평시작전통제권이 반환된 해로 이에 대한 평통사의 논평도 찾아볼 수 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연합 권한 위임사항의 문제점을 짚고 있다.

“사실 그때 같이 했던 사람들 이름들이 다 기억이 안나요. 그중에는 한명숙이나 지은희처럼 정계진출 한 사람들도 있는데, 마음이 안 좋죠. 또 그때는 참 열심히 했지만 지금 평통사 활동에 같이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기도 하죠.”

<다음호에 계속>

| 이모저모 |

평통사 13차 정기총회 열려

지난 3월 1일 13차 정기 운영위원 총회와 출범식이 열렸다. 이번 행사에서 회원들은 300명의 회원을 확대하여 침략적 한미동맹 해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실현할 것을 결의하였다. 인천과 부천회원들은 멋진 공연으로 출범식을 축하했고, 팽성, 무건리, 매향리 등 평통사가 함께 투쟁해 온 주민들도 연대의 인사를 건넸다.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는 당일날 바로 회원가입을 하였으며, 민가협 임기란 어머니는 “무엇을 해도 예쁜 조직”이라고 평통사를 칭찬하였다. 안동평통사와 장도정 회원이 모범지역과 모범회원으로 표창을 받기도 했다.

2.13 합의 역행하는

한미연합연습 중단해야

지난 6일, 주한미군사령부는 3월 25일부터 31일까지 한반도 전역에서 한미연합전시증원 및 독수리(RSOI&FE)연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월 13일에 합의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로 모처럼 북-미, 남-북 대화가 활발한 시점에 대규모 북한선제공격연습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를 파괴하는 것이 바로 미국이라는 사실을 확인케 했다. 지난해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올해 RSOI 연습에 해상배치선단을 이용해 사상 처음으로 중무장한 미증원군 1개 여단이 한반도에 전개하는 등 최대 규모의 미군전력이 참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진정으로 북미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할 의지가 있다면 지금 당장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지금 당장 멈춰! 한미FTA 협상을!

한미 FTA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고, 한미 FTA에 반대하는 민중들의 투쟁을 탄압하는 정권의 행태는 ‘막가파’ 수준이다. 지난 3월 10일 있었던 FTA 반대 범국민대회에서는 대표적인 보수언론인 매일 기자까지 전경에게 폭행당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경찰은 FTA 관련 집회뿐 아니라, 과병반대 집회, 한미연합연습 반대 집회에도 ‘불허’딱지 붙이기에 급급하다.

“가장 좋은 협상카드를 지금 당장 협상을 관두는 것”이라는 민중들의 경고를 청와대와 협상 실무단은 똑똑히 들어야 할 것이다.

방위분담금 대폭 삭감하고

협정을 폐기하라

지난 2월 7일 평통사 주최의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대표적인 ‘퍼주기 협정’인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평화통일연구소의 박기학 연구위원은 ‘2007년, 2008년 방위비 분담 증액의 부당성과 재협상의 필요성’이라는 발제문에서 주한미군이 자금난 운운하며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허구이며 미2사단 이전비용을 방위비 분담금에서 충당하는 것은 LPP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구체적인 근거를 들며 비판하였다.

평통사는 2월과 3월 협정문의 국회비준을 반대하는 다양한 활동을 벌였으며, 통일외교통상 상임위는 협정문을 통과시키면서도 평통사의 문제의식을 반영한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도 했다. 박기학 연구위원의 논문은 평통사 홈페이지 평화군축 자료실에서 볼 수 있다.

전북평통사,

월례 목요공개토론 모임 ‘공감’

전북평통사는 우리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고민과 의견을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공감”을 진행한다고 한다. 정치, 외교, 군사, 교육, 지방자치, 여성, 평화, 역사 등 우리사회의 주요한 관심사들을 주제로 매월 3째주 목요일에 관련 주제에 관심을 가진 모든 분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자리. 토론모임에 직접 못오시는 분들은 전화, 메일, 편지 등 다양한 방법들로 참여할 수 있다고 한다. “공감” 첫 번째 자리는 2월 22일 “중국의 고구려 역사 왜곡과 북핵문제, 그리고 한반도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렸다.

계양산 골프장 건설 반대

나무위 농성 100일

인천평통사의 윤인중 운영위원이 계양산 골프장 건설 반대를 요구하며 나무 위에서 생활한 지 100일이 다 되어 간다. 환경부는 계양산 골프장 건설 부적합 판정을 두차례나 내린 바 있다. 윤인중 운영위원은 ‘개발이익에만 눈이 멀어 생명평화를 파괴하는 돈 가진 자들’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각오를 다지고 있다.